

주간 통일정세

2015-17

Contents

I. 북한동향

1. 대남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3. 대내정치
4. 경제
5. 사회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2. 주변국 관련

III. 북한인권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2. 북한인권
3. 탈북자
4. 이산가족
5. 납북자
6. 국군포로
7. 대북지원
8. 북한동향

주간통일정세는 북한 및 국내외 언론보도를 참조하여 작성된 것임.

I. 북한동향

1. 대남

가. 공식발언 및 성명과 담화

- 북한 조평통, 인권법 추진 비난…“단호한 징벌”(5/2, 노동신문)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서기국 보도에서 “공화국에 인권문제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며 북한인권법 추진은 “동족대결을 정당화해 사면초가의 통치위기에 서 벗어나 보려는 흉악한 속셈”이라고 주장했다고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보도함.
 - 또 새누리당이 체면을 세우고 싶다면 국가보안법 등 ‘반인권악법들’을 철폐하라며 “우리의 존엄과 체제에 도전하는 자들을 추호도 용납하지 않고 무자비하고도 단호한 징벌을 가할 것”이라고 위협함.

나. 주요 매체 대남 논평

- 북한, 탈북자 단체장들 시리즈로 비방 공격(4/27,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쓰레기는 체매에 쓸어 버려야 한다’는 제목으로 모두 10편의 기획물을 보도하며 탈북자 단체장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쏟아냄.
 - 북한은 최근 대북전단을 살포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리민복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탈북자 출신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해 북한에서의 생활과 인격을 악의적으로 묘사함.
- 북한, 남북대화 기대감에 연일 ‘찬물’…“파렴치”(4/28,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28일 ‘분별없는 추태의 대가를 톡톡히 치르게 될 것이다’라는 글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최근 중남미 순방 중 ‘대화’를 언급한 것을 “도적이 매를 드는 격의 파렴치한 추태이며 흑백전도의 극치”라고 비난함.
 - 이어 키 리졸브와 독수리 등 한미 합동군사연습, 북한 인권결의안, 대북전단 살포 및 지난 23일의 한·미통합국방협의회(KIDD) 회의 등을 거론하며 “실제적

으로 대화를 파괴한 자들은 바로 남조선 집권자를 비롯한 괴뢰당국”이라고 주장함.

- 북한 “남북대화 기대 일러…8월 을지훈련 김행말라”(4/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전쟁연습이 계속되는 한 대화는 있을 수 없다’는 제목의 글에서 “남조선 당국이 미국과 합동군사연습을 중지할 자세를 보이지 않는 조건에서 대화와 협력, 관계개선에 대한 기대는 너무 이르다”고 주장함.
 - 신문은 남한에서 독수리훈련 종료와 관련해 긴장국면이 완화되고 대화의 길이 열릴 것이라는 여론이 나돌고 있다며 “위험천만한 북침 합동군사연습을 벌여놓고 아무 일도 없는 듯이 대화와 협력을 운운하는 것은 파렴치의 극치”라고 비난함.
- 북한, ‘기밀누출’ 대북사업가 실행 비난…“모략책동”(5/2, 우리민족끼리)
 - 우리민족끼리는 ‘또 하나의 모략 날조극’이라는 논평에서 이번 판결을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이나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등에 빗대어 정부의 통치위기를 수습하고 “(북한) 이미지에 먹칠을 해보려는 흉심”이라고 주장함.
 - 우리민족끼리는 강씨의 자료는 비밀 가치가 조금도 없으면서 남한 당국이 간첩사건을 ‘조작’한 것은 “우리(북한)에 대한 우롱이고 도발”이자 “극악한 인권불모지로 변한 남조선 현실”이라고 폄하함.

다. 남북 당국 회담 및 정치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남 군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남북 경제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바. 남북 사회 관계

- 대북교류·지원 ‘훈풍’…지자체·문화체육계 재개 시동(5/3, 연합뉴스)
 - 1일 통일부에 따르면 광복 70주년이자 분단 70주년을 맞은 올해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 문화와 역사, 스포츠 등의 분야에서 남북교류를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나아가 자치단체 및 민간단체가 주도적으로 참여하는 인도적 지원사업도 확대하기로 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특히 지자체의 사회·문화 교류와 인도적 협력사업을 확대하고 민간 교류에 언론인의 참여 및 동행 취재도 허용하기로 했다고 뉴스는 전함.

- ‘세월호 참사’ 1주년 범국민집회 진행 관련 ‘청와대어로의 시위행진을 경찰병력이 무차별적 진압을 감행했다’고 비난하며 ‘지금 온 겨레가 반인민적·반인권적인 괴뢰패당을 반대하여 들고 일어났다’고 왜곡 주장(4.26, 중앙방송)
- 남한의 ‘독수리 합동연습 종료에 따른 남북 긴장국면 완화·대화기대 표명’에 대해 ‘남한 당국은 대화타령을 늘어놓기 전에 북침합동군사연습부터 중지하는 용단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4.28, 중앙통신·노동신문)

2. 핵문제 및 외교안보

가. 공식발언과 제안

- 북한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한반도 핵전쟁 위험 커져”(4/29, 연합뉴스)
 -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29일 서기국 보도를 통해 “이번 원자력협정 개정 높음은 침예한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동북아지역에 핵전파와 핵군비경쟁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범죄적 책동”이라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조평통은 미국이 지금껏 남한의 핵개발을 묵인 조장해왔으며, 남한은 이번 협정으로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등을 노골적으로 감행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함.

- 이어 “미국과 괴뢰들은 더 이상 우리의 핵에 대해 시비할 명분도, 구실도 없게 됐으며 핵전파의 주범, 핵군비 경쟁의 장본인으로서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함.
- 북한 외무성 “사드 배치 대응해 군력 더욱 강화”(4/30,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가 30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사드가 남조선에 배치되면 동북아 대국들 사이의 충돌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그 불씨가 우리에게도 튀게 되는 만큼 그에 대응해 군력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대변인은 “주변 나라들이 사드의 남조선 배치가 위험계선을 넘으면 남조선이 다른 나라들의 핵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드 배비에 대한 그들의 우려와 경계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함.
- 북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동북아 군비경쟁 불러올 것”(5/1,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이 30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일 군사동맹 강화는 동북아시아의 정세 안정을 파괴하고 지역에서 대립과 마찰을 증대시키며 분쟁과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북한은 “미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마치 우리의 위협 때문인 듯이 떠들어대고 있지만 일본 자위대 역할을 확대해 막대한 군사비 부담을 덜고 유라시아 대륙에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음흉한 속심이 있다”고 지적함.

나. 주요 매체 논평

- 북한 “핵전쟁 미국 본토서 벌어질 것”(4/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2면 ‘태양은 조선에 있다’는 제목의 정론에서 “북한의 최전방은 38선이 아니고 적어도 태평양상에 그어질 것이며 정의의 핵대전은 미국 본토에서 벌어질 것”이라고 보도함.
 - 신문은 타격 목표도 남한 군대나 일본 자위대, 미군기지가 아니라고 강조하고 “미제가 쓰디쓴 참패를 자기 땅덩어리에서 맛보게 하자는 것이 김정은 장군의 단호한 결단”이라고 주장함.

- 북한 “미국의 북핵 위협론은 군수업체들 위한 것”(4/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일석이조의 망상은 버려야 한다’는 제목의 논평을 통해 “미국은 우리의 핵무기 보유에 대해 애써 부정하며 핵무기 존재 자체를 거부해왔으나 갑자기 돌변했다”면서 이렇게 주장함.
 - 통신은 “미국이 소형화된 핵무기나 미국 본토에 대한 핵타격이니 뭐니 하고 들고다니면서 부쩍 여론화하는 속심은 다른데 있지 않다”면서 “조선반도 정세를 주기적으로 악화시켜 저들이 노리는 목적을 달성하자는 것”이라고 풀이함.

- 북한, 유엔본부서 열린 인권행사 비난(5/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일 논평에서 “미국이 또다시 인권토론회를 벌여 놓은 것은 허황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인권문제로 공화국의 존엄과 영상(이미지)에 먹칠을 하려는 것을 실증해줬다”고 강조함.
 - 통신은 북한의 유엔대표부 직원들이 이날 토론회 진행을 방해하는 국제적인 추대를 보인데 대해서는 오히려 “탈북자들을 내세워 있지도 않은 우리의 인권문제를 꺼내 국제사회에 여론화하려던 미국의 책동이 만장의 조소와 비난을 받고 유산됐다”고 주장함.

다. 회담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라. 대미국

- 특이사항 없음.

마. 대중국

- 북측인사 “시진핑 먼저 평양 방문해야 김정은 베이징 방문”(5/1, 연합뉴스)
 - 북한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은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중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주석의 평양 방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연합뉴스가 전함.
 - 그는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김 제1비서가 오는 9월 제2차대전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먼저 시 주석이 오는 8월 북한의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야만 한다”고 덧붙임.

바. 대일본

- 북한, 아베 ‘군 위안부 인신매매’ 발언 맹비난(4/30, 연합뉴스)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이 29일 “아베의 발언은 피해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일본군 성노예들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니라 군국주의 일본이 강권을 동원해 체계적으로 감행한 성노예 범죄의 피해자”라고 강조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대변인은 “아베를 비롯한 일본 우익 보수 세력이 과거 범죄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교활한 말장난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인간의 도덕과 양심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무뢰배, 정신병자의 행위”라고 비난함.

사. 대러시아

- 러시아-북한 경제협력위 7차회의 평양서 개최(4/27, 연합뉴스)
 - 러시아와 북한 정부 대표단이 27일(현지시간) 평양에서 제7차 러-북 통상경제·과학기술협력 정부 간 위원회를 열었다고 연합뉴스가 보도함.
 - 러시아 극동 지역 인터넷 통신 ‘프리모르스키 레포르토르’에 따르면 알렉산드르 갈루슈카 러시아 극동개발부 장관과 리룡남 북한 대외경제상이 이끄는 양국 대표단은 이날 평양 만수대 의사당에서 열린 회의에서 에너지, 인프라,

교육·과학 기술 등 다양한 분야에 걸친 협력 문제를 논의하고 회의 결과를 담은 의정서에 서명함.

- 보도에 따르면 양측은 회의에서 러시아 전력의 북한 공급을 위한 정부 간 협정과 북한 단천 지역 지하자원 공동개발에 관한 정부 간 협정을 체결키로 합의했으며 양국은 러시아 극동의 잉여 전력을 북한 나선 경제특구로 공급하는 사업을 추진 중이라고 밝힘.

■ 북한, 러시아 전승절 행사 손님맞이 자세하게 소개(4/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본격화 되는 러시아에서의 전승절 경축행사 준비’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러시아가 위대한 조국전쟁승리의 날인 5월9일이 하루하루 다가옴에 따라 경축행사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고 소개함.
- 신문은 특히 러시아 당국이 전승행사를 부각하기 위해 외국 손님들을 초청하는 사업을 빈틈없이 하고 있다며 “이미 국제기구들과 수십개 나라들에서 행사에 참가할 적극적인 의사를 표시했다”고 전함.

아. 국제기구

- 특이사항 없음.

자. 기타 국가

- 특이사항 없음.

- 北 리룡남 대외경제상, 4월 26일 러시아연방 경제대표단과 평양에서 회담 진행(4.26,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영남, 4월 27일 네팔 지진 관련 同國 대통령(람 바란 야다프)에게 위로 전문(4.27, 중앙통신·중앙방송)
- 美·日 등 ‘북핵위협(美 본토 핵타격권·핵무기 소형화 등) 부각’은 “사드의 남조선 배치와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 미·일·남조선 3각공조 구축과 6자회담 재개 등 명분을 세워보려는 것”이라고 비난 및 ‘핵무력 강화’ 강조(4.28, 중앙통신·노동신문)

- 일본의 對北외교 실패는 '對美 추종적인 對北 외교정책 실시'라며 日 정부의 '北·日회담 입장 및 北 핵·인권문제 제기 등 對北 정책'을 "미국의 대조선 적대시 정책의 대변자·나팔수"로 조소(4.28, 중앙통신·노동신문)
- 韓美 원자력협정 개정안 가서명 관련, '미국이 핵무장화의 길을 열어준 범죄적 망동이며 핵무기개발에 합법성까지 부여하였다'고 비난하며 '韓美는 핵억제력강화 조치를 시비할 궤물만한 자격도 체면도 없다'고 주장(5.2, 중앙통신·노동신문)

3. 대내정치

가. 김정은 동향

- 북한 김정은, '훈련일꾼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5/1, 조선중앙통신)
 - 김정은 黨 제1비서가 인민군 제5차 훈련일꾼대회 참가자들과 기념사진을 찍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1일 전함.
 - 통신은 이날 촬영 소식을 전하며 황병서 군 총정치국장, 리영길 군 총참모장, 박영식 총정치국 조직부국장, 럽철성 총정치국 선전부국장, 조경철 군 보위사령관, 방관복 총참모부 제1전투훈련국장 등이 참석했다고 밝혔음.

나. 주요 엘리트 및 간부 동향

- 북한, 주브라질 대사에 김철학 임명(4/29,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9일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령에 따라 김철학이 주브라질 대사에 임명됐다고 보도함.

다. 공식 행사

- 북한, 노동절 맞아 기념식 등 다채로운 행사 벌여(5/1, 조선중앙방송, 노동신문)
 - 조선중앙방송은 1일 '5·1절'(노동절)을 맞아 기념식과 무도회, 체육경기 등 다채로운 행사를 벌이는 한편 김정은 黨 제1비서와 당과 수령에 대한 높은

- 충실성을 지니고 좋은 일을 한 평양철도국, 나진항, 텔레비전국, 평양안경상점, 개성시급양관리소, 철도성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냈다고 보도함.
- 노동신문도 1일 ‘전체 근로자들이여, 승리의 경축광장을 향하여 폭풍쳐 내달리자’는 제목의 사설에서 “모든 근로자들은 원수님의 사상과 노선, 방침의 절대적인 신봉자, 견결한 옹호자, 철저한 관철자가 돼야 한다”고 촉구함.
 - 신문은 5·1절은 “근로자들이 위대한 어머니당과 사회주의 조국을 위해 한 몸 다 바칠 혁명적 신념과 애국 의지를 굳게 가다듬을 계기”라며 항일 투사들의 ‘돌격 정신’, ‘육탄 정신’을 지닐 것을 독려함.

라. 주요 기관 행위

- 특이사항 없음.

마. 주요 구호 및 논조

- 북한, ‘체육강국 건설’ 연일 강조…“체육신화 만들자”(5/1,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1면 사설 ‘체육강국의 결승선을 향하여 더욱 힘차게 내달리자’에서 광복 및 당 창건 70주년인 올해 체육인들이 ‘체육강국’ 건설을 위한 선봉대·척후대가 돼야 한다고 강조함.
 - 또 내각의 부처 뿐 아니라 각 도·시·군에서도 체육부문 후원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며 “체육부문을 잘 도와주는 것은 결코 취미나 기호상의 문제가 아니라 애국심 문제이고 당의 체육중시 사상을 진심으로 받드는가 그렇지 않는가를 판별하는 시금석”이라고 주장함.
 - 이어 사설은 이어 온 나라에 ‘체육중시기풍’을 세워야 한다며 “체육사업이 잘되는 지역과 단위는 예외없이 생산이 잘되고 당정책 관철에서 앞장선 지역과 단위”라고 주장함.

- 박봉주(내각총리), 순천화학연합기업소와 2·8직동청년탄광 현지요해(4.27, 중앙통신·중앙방송)
- 박봉주(내각 총리), 평양 과학기술전당 건설장 현지 요해 및 평양메기공장개건 정형 요해(5.1, 중앙통신·중앙방송)
- 김정은 黨 제1비서, 신설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 현지지도(5.3, 중앙통신·중앙방송)

4. 경제

가. 정책 동향

- 특이사항 없음.

나. 주요 후속 조치

- 북한, 룡매도 간척사업으로 15km²규모 간척지 개간(4/28,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8일 “황해남도간척지건설연합기업소 일꾼과 건설자들이 지난 26일 룡매도 간척지 6구역 방조제 마감막이 공사를 성과적으로 끝냈다”고 보도함.
 - 신문은 이번 공사를 통해 1천500정보의 새 땅을 찾았다고 선전하며 이를 위해 170만m²의 흙을 퍼내고 17만m²의 장식 공사, 8천800여m의 방조제 마감막이공사를 진행했다고 설명함.
- 북한, 대형 국제여행사 설립…“관광사업 활성화”(4/30,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30일 지난 1월 평양시 중구역에 설립된 ‘평양고려국제관광사’는 러시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10개국에 지사를 두고 함흥·원산시에 각각 분사를 낸 채 현재 활발히 영업 중이라고 보도함.
 - 이 관광사는 평양고려호텔, 향산호텔, 마식령호텔, 묘향산특산물식당, 개성고려봉사관매소 등과 연계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평양-마식령, 원산-마식령 등 유명 관광구간에는 관광버스도 운영함.

다. 경제 상황

- 특이사항 없음.

라. 대외 경제관계

- 북한, 러시아 파견 노동자 4만 7천여 명(4/30, 미국의소리)
 -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한 노동자가 4만7천명을 넘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러시아 노동부를 인용해 30일 보도함.
 - 러시아 노동부가 내놓은 외국인 고용허가증 발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러시아에서 고용허가를 받은 북한 노동자는 4만7천364명으로 전년동기보다 27% 늘었음.

5. 사회**가. 공식 발언 및 주요 조치**

- 특이사항 없음.

나. 시장 관련

- 특이사항 없음.

다. 국경통제 및 탈북 관련

- 북한 “한국계 미국 뉴욕대생, 불법입북”(5/2,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한국계 미국 영주권자인 뉴욕대 학생 주원문(21·뉴저지 주 거주)씨가 “4월 22일 중국 단둥에서 압록강을 건너 비법입국하다가

단속되었다”고 전함.

- 통신은 이어 “현재 공화국의 해당기관에서 주원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그는 자기 행위가 공화국법을 침해한 엄중한 범죄로 된다는 데 대하여 인정하였다”고 밝힘.

라. 각종 단속 및 검열

- 특이사항 없음.

마. 사회 동향

- 북한 “전체 노동자 대졸자 수준 과학인재로 키운다”(4/27, 노동신문)
 - 노동신문은 27일 “지식경제강국 건설의 주력부대인 노동계급을 대학 졸업 정도의 일반지식과 현대과학기술 소유자로 키우기 위한 투쟁이 맹렬히 벌어지고 있다”고 소개함.
 - 신문은 특히 김책공업종합대학(김책공대) 원격교육대학에서 5년 전 첫 원격강의를 시작한 이후 처음으로 오는 10월 졸업생을 배출한다고 자랑함.
- 북한, 6개 도에 체육대학 설립 추진(4/28, 조선중앙통신)
 - 조선중앙통신은 28일 북한 김명수 체육성 국장을 인용해 함경북도 청진, 량강도 혜산, 자강도 강계, 평안남도 평성, 황해남도 해주, 강원도 원산에 체육대학이 설립된다고 보도함.
 - 통신은 체육대학 설립 사업에 대해 “체육강국 건설에 이바지할 능력 있는 체육부문 지도 일꾼과 과학자, 감독을 더 많이 키워내려는 목적”이라며 “해당 지역 대중체육, 학교체육 등 체육기술 발전에서 전환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설명함.
- 미국 구호단체, 내달 북한서 B형간염 예방접종(4/29, 미국의소리)
 - 미국의 구호단체가 북한의 보건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B형간염 예방접종을 하기

위해 다음달 방북한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29일 전함.

- 미국 비정부기구(NGO)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의 테리 스미스 국장은 북한으로부터 비자 승인을 받아 오는 5월19일부터 6월6일까지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북한 학술지, 구글·트위터 소개…“활용 필요”(1/20,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5/3, 연합뉴스)
 - 연합뉴스가 3일 입수한 계간 김일성종합대학 학보 2015년 1호(1월20일 발행)는 ‘사회경제발전의 중요자원인 대용량자료와 그 활용의 세계적 추세’라는 제목의 논문에서 IBM, 구글, 애플, 오라클, HP 등이 세계 IT시장을 주도하고 있다고 소개함.
 - 논문은 유럽연합(EU)의 경우 ‘iKnow’ 같은 전략을 통해 전 지구적 네트워크를 시도하고 있다며 북한도 “나라의 경제를 비약적으로 발전시키는 데서 대용량자료의 활용이 갖는 역할”에 대해 제대로 인식하고 “적극 활용해야 한다”고 주문함.
- 북한, 이달 하순 ‘국제여성대행진’ 행사 진행(5/3, 조선중앙통신)
 - 북한은 5월 하순 한반도 통일과 평화를 기원하는 국제여성대행진 행사를 진행하기 위해 ‘조선의 통일과 평화를 위한 국제여성대행진’ 준비위원회를 결성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3일 보도함.
 - 통신은 “국제여성대행진은 조국 해방 일흔돌을 맞으며 자주통일의 대통로를 열어나가기 위한 조선 인민의 투쟁을 고무하고 조선반도의 통일과 평화를 바라는 국제사회의 목소리를 고조시키는 데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함.

- 평양외국어대학 러시아어센터 설립 6주년 기념모임, 4월 28일 대학에서 박정진(평양외국어대학장)·주북 러시아 대사 등 참가한 가운데 진행 및 ‘하바롭스크시의 북한에 기증한 교재’ 전달(4.28, 중앙통신·중앙방송)

© 북한연구실 제공

II. 동북아정세

1. 대북한 관련

가. 북핵 문제 및 6자회담

- 북한, 핵융합기술 이용한 핵발전소 건설중(4/28, 연합뉴스)
 - 북한이 핵융합기술을 이용한 핵발전소(원자력발전소)를 지방에 건설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미국의 친북 웹사이트 ‘민족통신’을 운영하는 노길남 대표는 중국 선양(瀋陽)에서 만난 북한 과학자들의 말을 인용해 이같이 전하고 “언젠가 세상을 깜짝 놀라게 할 기념비적 발전소가 탄생할 것”이라고 밝혔다.
 - 이에 앞서 민족통신 공동취재단은 지난해 5월 방북 취재 당시에도 북한 경제 무역관련 간부로부터 핵융합기술 시험 성공을 암시하는 발언을 들었다고 보도한 바 있고, 노 대표의 주장이 어디까지가 진실인지 확인할 수 없지만, 개인의 주장으로만 치부하기는 어려워 보임. 북한은 과거에도 핵문제 같은 민감한 현안의 경우 공식 입장 발표에 앞서 친북 인사의 입을 통해 미리 흘리며 국제사회의 반응을 떠보는 행태를 보였음.

- 사일러 특사, “믿을만한 北비핵화, 현재 활동 중단서 시작”(4/29, 연합뉴스)
 - 북핵 6자회담 미국 측 차석대표인 시드니 사일러 미국 국무부 6자회담 특사는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는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것을 멈추는 데서 시작한다”고 말했다.
 - 사일러 특사는 이날 서울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아산정책연구원이 연 국제관계 포럼 ‘아산 플래넘 2015’의 한반도 세션 토론에서 “우리는 대화 테이블로 오기도 전에 플루토늄 한 방울 한 방울을 포기하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다”라며 그는 “불안정성을 야기하는 북한 핵프로그램의 특성 때문에 CVID가 필요하다”며 “진정하고 믿을 만한 비핵화로의 길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활동의 중단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우리 모두 안다”고 말했다.
 - 한편, 북한을 제외한 6자회담 참가 5개국은 최근 6자회담 재개를 위한 일정한 조건에 사실상 합의하고 이에 대한 북측의 입장을 알아보기 위한 이른바 ‘탐색적 대화’를 타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사일러 특사의 이런 발언은 미국을

비롯한 5자간에 논의되는 비핵화 협상 재개의 여건과 관련된 것으로 분석됨.

- 북한,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한반도 핵전쟁 위험 커져”(4/29, 연합뉴스)
 - 북한은 최근 타결된 한미 원자력협정으로 한반도와 동북아지역의 핵전쟁 위험성이 더욱 커졌다고 핵 억제력을 강화하겠다고 주장했다.
 - 북한 조국평화통일위원회(조평통)는 서기국 보도를 통해 “이번 원자력협정 개정 내용은 참여한 조선반도 정세를 더욱 격화시키고 동북아지역에 핵전파와 핵군비경쟁을 몰아오는 위험천만한 범죄적 책동”이라고 비난했음.
 - 또한, 미국이 지금껏 남한의 핵개발을 묵인 조장해왔으며, 남한은 이번 협정으로 핵연료 재처리와 우라늄 농축 등을 노골적으로 감행하면서 핵무기를 개발할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과 괴뢰들은 더 이상 우리의 핵에 대해 시비할 명분도, 구실도 없게 됐으며 핵전파의 주범, 핵군비 경쟁의 장본인으로서의 책임에서 절대로 벗어날 수 없게 됐다”고 강조함.

- 북한, 영변 원자로 재가동한 듯…보수작업 가능성도(4/30, 연합뉴스)
 - 북한이 영변의 핵 원자로를 저전력 또는 간헐적으로 가동하고 있을지 모른다고 미국 싱크탱크 과학국제안보연구소(ISIS)가 29일(현지시간) 보고서에서 밝혔음.
 - ISIS는 올해 1~4월 찍힌 위성사진을 판독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한 보고서에서 북한이 영변 핵 시설 내 원심분리기를 재가동하고, 해당 시설에 대한 보수작업도 준비하고 있을 수 있다고 분석함.
 - ISIS의 데이비드 올브라이트와 세리나 켈러 버건티니 연구원은 보고서에서 원자로와 터빈 건물의 지붕 위 눈이 녹는 형태를 관찰한 결과, 건물 내부가 뜨거운 상태임을 시사해준다면서 이렇게 추정했음. 또 원자로 배출구에서 운수가 방류되고 있다는 조짐도 있다고 지적함. 영변 원자로의 재가동 가능성에 관한 ISIS의 이런 분석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는 시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주목됨.

- 북한, 새 로켓 발사 지휘소 완공…로켓 발사 또 하나(5/3, 연합뉴스)
 - 북한이 ‘로켓 발사’를 관장하는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새로 건설함.

- 북한 조선중앙통신은 3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새로 건설한 국가우주개발국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현지 지도했다고 보도함. 김정은 제1위원장은 3일 지휘소에서 “우주개발사업은 민족의 존엄과 자존심을 걸고 진행하는 중대사”라고 언급하며 인공위성을 계속 발사하겠다고 선언함.
- 이와 관련, 북한이 위성관제종합지휘소를 새로 짓고 김정은 제1위원장의 시찰 소식까지 공개한 것으로 미뤄 장거리 로켓 발사가 임박한 것으로 보인다는 관측도 나오고 있음. 김정은 집권 4년차이자 노동당 창건 70주년인 올해 대내외적으로 국력을 과시하기 위해 장거리 로켓 발사를 계획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고 분석됨.

나. 미·북 관계

- 북한 외무성, 사드 배치 대응해 군력 더욱 강화(4/30, 연합뉴스)
 - 북한은 남한에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THAAD)가 배치되면 강대국들 간 군사적 충돌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며 이에 대응해 군력을 더욱 강화할 것이라고 밝힘.
 - 북한 외무성 군축 및 평화연구소는 이날 대변인 담화를 통해 “사드가 남조선에 배치되면 동북아 대국들 사이의 충돌 위험이 높아지게 되고 그 불씨가 우리에게도 튀게 되는 만큼 그에 대응해 군력을 더욱 강화하지 않을 수 없다”고 선언함.
 - 또한 “주변 나라들이 사드의 남조선 배치가 위험계선을 넘으면 남조선이 다른 나라들의 핵공격 대상이 될 것이라고 경고를 보내고 있는 것은 사드 배비에 대한 그들의 우려와 경계심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고 설명함. 이어 “미국의 무력 증강 책동으로 갈수록 긴장이 격화되는 동북아의 현실은 핵무력을 포함한 전쟁 억제력을 철통같이 다져온 우리의 선택이 얼마나 정당했는가를 뚜렷이 실증 해준다”고 강조했다.
- 미국 정부기구, 北 종교 탄압국 유지 권고(5/1, 연합뉴스)
 - 미국의 독립 정부기구인 국제종교자유위원회(USCIRF)가 북한에 대해 종교의 자유를 탄압하는 ‘특별관심국(CPC)’ 지위를 유지하라고 국무부에 건의함.

- 국제종교자유위원회는 지난달 30일(현지시간) 발표한 ‘2015 연례 종교자유 평가 보고서’에서 “북한은 세계에서 가장 억압적인 정권 중 하나로 최악의 인권탄압이 이뤄지고 있으며 정부는 거의 모든 종교적 활동을 제한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 보고서는 종교를 가진 북한 주민 수천명이 노동 교화소에 갇히거나 중국으로 강제추방됐으며 특히 기독교도들이 가장 극심한 박해를 받고 있다고 설명함. 한편, 미국은 1998년 제정된 국제종교자유법(IRFA)을 근거로 종교의 자유를 조직적으로 탄압하는 국가를 특별관심국으로 지정하고 있음.
- 미국 국방예산안에 ‘북 미사일 대비 동부 MD’ 담겨(5/1, 연합뉴스)
 - 북한과 이란의 탄도미사일 위협에 대비해 미국 동부지역에 미사일방어(MD) 체계를 설치하기 위한 기본 예산이 내년 미국 국방예산안에 포함되었음.
 -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는 30일(현지시간) 동부 MD 구축계획 수립과 우크라이나 정부군 훈련지원 등의 내용으로 구성된 2016회계연도 국방수권법(NDAA) 법안을 찬성 60, 반대 2로 가결함.
 - 이 법안에 반영된 전체 국방비는 6천119억 달러(약 657조 원)로 동부 MD 구축계획에 대해 미국 국방부는 그동안 유보적인 입장이었지만, 하원 군사위는 MD 기지 배치를 위한 기본 계획과 기지 설계 등의 예산으로 3천만 달러를 배정함.
- 아베 총리, 과거사 언급 ‘역풍’…환영 일색이던 美정부 ‘중립 평가’(5/1,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9일(이하 현지시간)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내놓은 과거사 언급을 놓고 미국 내에서 역풍이 불고 있음. 미·일 동맹의 격상을 한껏 부각시키며 환영 일색이던 버락 오바마 행정부도 이 같은 기류를 의식한 탓인지 과거사 문제만큼은 논평의 수위를 조심스럽게 조절하는 분위기임.
 - 아베 총리를 향해 진정한 사과를 촉구하는 연명서함에 서명했던 스티브 이스라엘 (민주·뉴욕) 하원의원은 이날 논평을 내고 “아베 총리의 연설에 반성과 희생자들에 대한 존중이 없었던 것이 매우 실망스럽다”며 “아베 총리는 기회를 놓쳤다”고 비판했음. 이스라엘 의원은 전날 한인단체 관계자들과 함께 아베 총리를 규탄하는 시위에 참여하였음.
 - 미국 워싱턴 정치전문지인 ‘롤 콜’은 이 날자 1면 기사에 “어제 아베 총리의

연설은 완벽하게 수궁할만한 것이었지만, 한 가지 눈에 띄게 빠진 것이 있다”며 “바로 위안부 문제에 대해 명시적으로 사과하라는 요구를 회피한 것”이라고 지적함. 또한, 존 페퍼 미국 ‘외교정책포커스’ 소장은 30일 허핑턴포스트에 실은 기고문 에서 “아베 총리는 의도적으로 위안부 문제를 언급하지 않았다”며 “우리의 행동이 아시아의 국민들에게 고통을 안겨다 줬다는 사실을 인정하고는 곧바로 눈을 무역과 안보문제로 돌렸다”고 지적함.

다. 중·북 관계

- 北 탈영병 추정 괴한, 중국인 3명 살해(4/29, 연합뉴스)
 - 탈영한 북한군 병사로 추정되는 괴한 3명이 최근 북중 접경지역의 중국 시골 마을에서 중국인 3명을 살해하고 달아났다고 중국 신경보(新京報)가 29일 보도했음.
 - 24일 밤 군복 차림의 북한 남자로 추정되는 3명이 국경을 넘어 지린(吉林)성 허룽(和龍)시 룡청(龍城)진 스런(石人)촌에서 촌민 3명을 살해한 뒤 달아났다고 전했다.
 - 홍레이(洪磊)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의에 “공안당국에 확인한 결과 24일 허룽시에서 1건의 형사사건이 발생, 중국인 3명이 살해됐다”면서 공안기관이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고 밝힘. 이 사건의 범인이 북한군으로 확인된다면 북중 관계에도 일정 부분 악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음. 전례로 볼 때 중국 정부는 자국민의 피해사건에 대해 북한 측에 엄중히 항의하고 재발 방지를 촉구할 것으로 보임.
- 북측인사, “시진핑 주석 먼저 평양 방문해야 김정은 제1위원장 베이징 방문”(5/1, 연합뉴스)
 - 북한의 비공식 대변인으로 불리는 김명철 조미평화센터 소장은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중국을 방문하기에 앞서 시진핑(習近平) 중국 국가 주석의 평양 방문이 먼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는 1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김 제1위원장이 오는 9월 제2차대전 승리 70주년 기념 열병식 참석을 위해 베이징을 방문하는 것은 가능하다면서도 “그러나 먼저 시 주석이 오는 8월 북한의 (광복) 7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야만 한다”고 덧붙임.

- 또한 그는 김정은 방러 취소와 관련, 러시아에 ‘특별 대우’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은 데 따른 결정이라는 언론 보도에 대해 “허튼소리”라고 일축하고 “북한은 김 제1위원장이 러시아를 방문할 것이라고 말한 바 없다. 그의 방러는 러시아 측 희망을 담은 생각”이라고 언급함.

라. 일·북 관계

- 북한, 아베 총리 ‘군 위안부 인신매매’ 발언 맹비난(4/30, 연합뉴스)
 - 북한은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 대신 ‘인신매매’라고 에둘러 언급한 것에 대해 ‘무뢰배’, ‘정신병자’라며 맹비난했음.
 -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29일 “아베의 발언은 피해자들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모독”이라며 “일본군 성노예들은 인신매매 피해자가 아니라 군국주의 일본이 강권을 동원해 체계적으로 감행한 성노예 범죄의 피해자”라고 강조하였고, “아베를 비롯한 일본 우익 보수 세력이 과거 범죄에 대해 극구 부인하고 교활한 말장난으로 책임을 회피하려는 것은 인간의 도덕과 양심이라고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무뢰배, 정신병자의 행위”라고 비난했음.
 - 그는 아베 총리가 여성발전기금에 올해 2천200만달러를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힌 것에 대해서는 “신성한 인권을 몇푼의 돈으로 흥정하면서 인류를 우롱하는 너절한 처사”라고 험담했음.
- 북한, “미일 방위협력지침 동북아 군비경쟁 불러올 것”(5/1, 연합뉴스)
 - 북한이 일본 자위대의 작전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미일방위협력지침 개정이 동북아지역의 분쟁과 군비 경쟁을 불러올 것이라고 비난하였음.
 - 북한 외무성은 30일 대변인 담화를 통해 “미일 군사동맹 강화는 동북아시아의 정세 안정을 파괴하고 지역에서 대립과 마찰을 증대시키며 분쟁과 군비경쟁을 불러오는 결과만을 가져오게 될 것”이라고 주장하며, “미국은 미일 방위협력지침 개정이 마치 우리의 위협 때문인 듯이 떠들어대고 있지만 일본 자위대 역할을 확대해 막대한 군사비 부담을 덜고 유라시아 대륙에서 지배적 지위를 유지하는 데 음흉한 속심이 있다”고 지적했음.

- 외무성 대변인은 또 미국이 범죄적 과거사를 부정하는 일본에 대한 국제사회의 우려를 무시하고 자신들의 목적 실현을 위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부추기고 있다고 비난함.

마. 러·북 관계

- 북러, 가스분야 협력 방안 논의(4/29, 연합뉴스)
 - 러시아와 북한 에너지 당국이 28일(현지시간) 가스분야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고 러시아 국영가스회사 ‘가스프롬’ 공보실이 밝힘.
 - 공보실은 이날 내놓은 보도자료에서 “알렉세이 밀레르 가스프롬 사장과 모스크바를 방문한 배학 북한 원유공업상이 실무 회담을 열었다”며 “양측이 가스분야 협력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소개했음.
 - 공보실은 그러나 상세한 논의 내용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음. 전문가들은 양측이 이날 회담에서 북한의 나선 경제특구로 러시아 사할린산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문제가 논의됐을 수 있다고 추정했으며, 러-북 양측은 북한을 거쳐 한국으로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이 교착 상태에 빠진 상황에서 우선 나선 경제특구로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을 논의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북한, 러시아 파견 노동자 4만7천여명(4/30, 연합뉴스)
 - 북한이 러시아에 파견한 노동자가 4만7천명을 넘었다고 미국의소리(VOA) 방송이 러시아 노동부를 인용해 보도했음.
 - 러시아 노동부가 내놓은 외국인 고용허가증 발급 현황에 따르면 지난 1분기 러시아에서 고용허가를 받은 북한 노동자는 4만7천364명으로 전년동기보다 27% 늘었음. 러시아는 최근 루블화 가치가 떨어지면서 외국인 노동자들이 전년 같은 기간보다 12% 줄었지만 북한, 베트남, 불가리아 등에서 온 노동자들은 오히려 늘어나고 있음.
 - 이에 대해 러시아 취업정보 회사 ‘페니 레인 퍼스넬’ 관계자는 이에 대해 “북한과 베트남은 현지 임금이 너무나 낮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음. 한편, 러시아 내 북한 노동자의 수는 앞으로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임. 막심 세레이킨 러시아 극동개발부

차관은 “북한 노동자들은 임금이 낮으데다 규율이 잘 잡혀 있고 북한 당국의 관리를 받고 있어 통제가 쉽다”며 중국 노동력을 북한 노동자로 대체할 뜻을 내비쳤음.

- 北 김정은 위원장 러시아 승전행사 불참…외교채널로 통보(4/30, 연합뉴스)
 - 김정은 북한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다음달 모스크바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기념식에 참석하지 않는다고 크렘린궁이 30일(현지시간) 밝혔음.
 - 타스 통신 등에 따르면 드미트리 페스코프 대통령 공보비서(공보수석)는 이날 기자들에게 다음달 9일 2차대전 승전 기념행사에 참석이 예정됐었던 김 제1위원장이 “평양에 남기로 결정했다”고 전함. 페스코프는 “그(김정은)가 모스크바 행사에 참석할 수 없게 됐다. 외교 채널을 통해 우리에게 이같은 결정이 전달됐다. 이는 북한의 내부 문제와 연관된 것이다”고 말했음.
 - 페스코프는 앞으로 언제 양국 정상 간 만남이 가능할지를 묻는 질문에 “현재까지 구체적 계획은 없다”고 밝힘. 이는 승전 기념식을 전후한 러-북 양자 회담 가능성도 부인한 것으로 해석됨.

- 북한 김정은 위원장 방러 취소, 방공미사일 구매실패 탓(5/2, 연합뉴스)
 - 북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오는 9일 러시아에서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불참키로 한 것은 방공미사일 S-300 구매 실패와 관련이 있을 수 있다는 분석이 제기되었음.
 - 홍콩 봉황(鳳凰)위성TV는 2일 러시아 특파원발 보도에서 러시아 군사전문가를 인용, 북한은 현영철 인민무력부장이 지난달 14일 모스크바에서 열린 국제안보 회의에 참석한 것을 계기로 러시아측에 S-300 4개 포대 구매를 제안할 계획이었다고 보도했음. S-300은 러시아가 구소련 시절 개발해 줄곧 개량해온 전투기 및 크루즈 미사일 격추용 지대공 미사일 시스템으로 상당히 효율적인 무기로 평가받음.
 - 그러나 북한의 물물교환 방식의 미사일 구매 요청에 러시아는 현금거래를 해야 한다는 입장과 함께 S-300은 지역의 전략적 균형을 깰 수 있어 중국 등의 동의를 필요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하였음. 이런 상황을 고려할 때 김 제1위원장의 갑작스러운 방러 취소는 북한의 무기와 차관 요구에 러시아가

적극적인 답변을 주지 않은 것과 큰 관련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고 봉황위성TV는 전함.

바. 기타

- 미국 전문가들, “대북 인권압박 지속하면 벽 무너져”(4/29, 연합뉴스)
 -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핵문제에 비해 다소 부차적이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지만, 인권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북한의 인권 탄압이라는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이 지적했음.
 - 미국의 인권변호사 제러드 겐서는 정책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이 개최한 북한 인권문제 토론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고통 받고 있음을 알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음. 토론자로 참석한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 외교전문대학원(플레처스쿨) 교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줄곧 부인만 하던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다”며 같은 입장을 보였음.
 - 또한,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INK)의 로버타 코언 공동위원장 역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일이 “북한 정권을 흔들 공포의 지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함. 전문가들은 단순히 북한 정권의 최고위층 인사 몇 명이나 조직 몇 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는 실무 책임자들의 신상을 파악해 제재 대상으로 삼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 북한인권 운동가 수잔 솔티, “북한 정권 곧 붕괴될 것”(5/2, 연합뉴스)
 - 미국의 북한인권 운동가인 수잔 솔티 디펜스포럼·북한자유연합 대표는 1일 (현지시간) 북한의 인권탄압을 규탄하면서 김정은 정권이 곧 붕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 솔티 대표는 이날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하나로 미 하원 레이번 빌딩에서 주최한 탈북자 초청 토론회 기조연설에서 “북한 정권이 언제 붕괴될 것이라고 물으면 나는 항상 ‘내일 붕괴된다’고 답을 한다”면서 이같이 밝힘.
 - 그는 “북한 정권이 언제 붕괴될지 모르지만 여기 있는 탈북자들이 그 목표를 위해 계속 투쟁하고, 또 목소리를 높이고 있어 곧 붕괴될 것으로 본다”면서

“북한에서 일어나는 비극을 줄이려면 이곳 미국에서도 싸워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음. 그는 또 “비록 우리가 그동안 먼 길을 달려왔지만, 앞으로도 계속 탈북자 단체들을 지원하고 이들이 한반도 평화통일을 이뤄낼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한다”고 덧붙임.

2. 주변국 관련

가. 한·미 관계

- 리퍼트 대사, “한국 가입, TPP 가치 크게 높일 것”(4/28, 연합뉴스)
 - 마크 리퍼트 주한 미국대사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협상에 한국이 참여하면 TPP의 가치를 크게 높일 것”이라고 밝혔음.
 - 리퍼트 대사는 세계경제연구원과 한국무역협회가 서울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연 조찬강연회에서 “한국은 아시아-태평양 지역 경제에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음. 또한, 리퍼트 대사는 “TPP는 높은 수준의 교역 협상으로 협상 마지막 단계에 와 있다”며 “협상이 타결되면 세계 교역의 30%, 전 세계 총생산(GDP)의 40%, 8억 명의 소비자를 아우른다”고 TPP 중요성을 설명하였음.
 - 리퍼트 대사는 “한국은 TPP 창립 회원국 중 일본, 멕시코를 제외한 국가들과 양자 간 자유무역협정을 맺고 있어 자연스럽게 TPP 회원국 후보로 거론된다”며 “한국이 TPP에 관심을 표명해 준 것은 미국으로서도 환영하는 입장이지만 실제로 어떻게 TPP에 가입할 수 있을지는 고민할 부분”이라고 덧붙임.
- 매케인 군사위원장, “일본은 행동하고 한국은 그걸 정당하게 평가해야”(5/1, 연합뉴스)
 - 존 매케인(공화·애리조나) 미국 상원 군사위원장은 과거사를 매듭짓기 위해 일본의 문제 해결 조치와 그에 대한 한국의 정당한 평가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 매케인 위원장은 1일자 요미우리 신문에 실린 인터뷰에서 “과거를 매듭지으려면 일본 정부와 총리가 일정한 행동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며 그런 한편, “한국 측에게도 그것을 정당하게 평가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밝히며, 이어 “한일 양국의 노력을 요구하고 싶다”며 “미국도 양국의 화해를 촉진 지원해야 한다”고

덧붙였음.

- 한편, 매케인 위원장은 또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걸출한 지도자”로 칭하고, 아베 총리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행한 미국 연방의회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 대해 “역사적이었다”고 평가함.

나. 한·중 관계

- 한·중 해양환경 공동조사 6년만에 재개(4/30, 연합뉴스)
 - 해양수산부는 한국과 중국이 지난 6년간 중단한 한·중 황해 해양환경 공동조사 사업을 오는 10월 재개한다고 밝힘.
 - 양국은 이달 7~29일 제주에서 열린 ‘제15차 한·중 황해 해양환경 공동조사 정부·및 과학자간 회의’에서 공동조사 사업 재개에 따른 구체적인 내용에 합의하였음. 황해의 해양환경 보전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추진한 한·중 황해 해양환경 공동조사 사업은 1997년부터 2008년까지 이어졌으나 2009년 중국 내부 사정으로 중단되었음.
 - 이와 관련, 한국과 중국은 사업 재개 필요성에 공감하고 작년 4월 중국 베이징(北京)에서 열린 양국 실무자 회의에서 2015년에 조사를 재개하기로 하였음. 이번 회의에서는 양국이 올해 10월부터 공동조사정점 4곳을 포함해 정점 40곳(중국 21곳·한국 19곳)을 조사하기로 하는 등 구체적인 조사 내용에 합의하였음.
- 한중일 환경장관회의 개막…中, 3년만에 장관 참석(4/30, 연합뉴스)
 - 제17차 한국·중국·일본 환경장관회의가 29일 중국 상하이(上海)에서 개막해 동북아시아 환경 현안에 대해 논의함.
 - 이번 3국 장관회의에는 윤성규 환경부 장관, 천지닝(陳吉寧) 중국 환경보호부 부장(장관), 모치즈키 요시오(望月義夫) 일본 환경성 대신(장관)이 참석하였음. 중국은 2012년 9월 일본이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국유화를 선언한 이후 2013년과 2014년 열린 3국 환경장관회의에 2년 연속 부부장(차관)을 참석시켰으나, 올해엔 장관이 직접 참석하였음.
 - 이번 회의에서는 황사와 초미세먼지(PM.2.5) 문제를 비롯한 대기오염 관리를

위한 기술협력, 유전자원의 활용에 대한 협약인 나고야의정서 이행 협력방안, 기후변화 적응 관련 정보교류 등이 주로 논의될 예정이다. 특히 한국이 민감하게 대응하고 있는 황사문제와 관련해서는 예보의 정확도를 높이고 중국지역 황사 발원지의 생태계 복원 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논의도 이뤄질 것으로 보임.

다. 한·일 관계

- 윤병세 장관, “전세계 이목이 아베 총리에”…美연설서 과거사반성 압박(4/28,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장관은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을 하루 앞둔 아베 신조 (安倍晋三) 일본 총리를 향해 “전 세계의 이목이 지금 아베 총리를 향해 있다”고 밝힘.
 - 윤 장관은 이날 아산정책연구원이 주최한 ‘아산플래툰 2015’ 국제관계 포럼 만찬 행사에서의 연설을 통해 “한국은 물론 미국, 국제사회로부터 아베 총리가 독일이 했던 것처럼 과거와 깨끗이 단절할 절호의 기회(golden opportunities)를 놓치지 말 것을 촉구하는 강한 목소리들이 나오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 이는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총리에 대해 29일 미 의회 연설에서 과거 식민지배와 침략, 일본군 위안부 문제 등 과거사에 대한 분명한 입장표명을 할 것을 강하게 촉구한 것으로, “역사의 올바른 편에 섰던 자가 승리해왔고, 승리할 것”이라면서 “미국의 역사학자가 언급했듯 우리는 미래를 내다보기 전에 과거를 돌아봐야 한다”고 언급함.

-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 백악관 앞 1인시위…“아베 총리, 역사세탁 중단하라”(4/28, 연합뉴스)
 - 새누리당 김종훈 의원이 28일(현지시간) 워싱턴DC 백악관 앞에서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침략역사 및 일본군 위안부 강제동원 부인을 규탄하는 ‘1인 시위’를 벌였음.
 - 새누리당 국제위원장이자 김 의원은 이날 위안부 피해자 및 아베 총리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 사진이 붙은 플래카드와 아베 총리가 2013년 5월 일본의 생체실험 부대인 731부대를 연상케 하는 731 편명의 전투기 조종석에 앉아 엄지손가락을 치켜들며 찍은 기념사진이 담긴 플래카드 2개를 내걸고 아베 총리의 왜곡된 역사관을 비판함.
 - 김 의원은 “아베 총리는 과거사를 직시하고 역사 세탁을 즉각 중단하라.

전범한테 경의를 표하는 것도 당장 그만두라”면서 “그것이 전후질서를 인정하는 것이며, 만약 지금처럼 역사를 계속 부정하면 모든 것이 무효가 되고 일본에도 장래가 없다”고 지적하였음.

- 아베 총리, 위안부 질문에 “전쟁중 여성인권 종종 침해”…사과 없어(4/29,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28일(현지시간)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 문제와 관련, 사과는 하지 않은 채 “깊은 고통을 느낀다”고 말했음. 아베 총리는 이날 워싱턴D.C 백악관에서 버락 오바마 대통령과 미·일 정상회담을 한 뒤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위안부에 대한 사과할 의사가 없느냐’는 질문에 이같이 답변함.
 - 아베 총리는 “위안부 문제와 관련해선 ‘인신매매(human trafficking)’ 피해자들이 받은 고통을 생각하면 깊은 고통을 느낀다”며 “이 점에서 역대 총리들과 다르지 않게 고노 담화를 계승하고 수정할 생각이 없다”고 언급함.
 - 이와 관련해 워싱턴의 한 외교소식통은 “그동안 아베 정권은 ‘고노담화를 수정할 생각이 없다’, ‘새로운 담화를 발표하는 것을 생각한다’, ‘고노 담화를 전체적으로 계승한다’고 밝혔지만, 이번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고노 담화를 계승한다고 했다”며 “고노 담화와 관련한 지금까지의 발언과 비교할 때 가장 명료한 것으로 보여 주목한다”고 말했음.
- 아베 총리의 능수능란한 외교, 박근혜 대통령 압박(4/30, 연합뉴스)
 - 미국을 방문 중인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능수능란하고 발빠른 외교술이 박근혜 대통령을 압박하고 있다고 미국의 한미 외교 전문가가 지적했음. 칼 프리도프 시카고국제문제협회 연구원은 미국 일간 월스트리트 저널에 기고한 글에서 “아베 총리의 발빠른 대미 외교로 불편한 한일 관계를 개선해야 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부담은 더욱 커질 것”이라고 말했음.
 - 프리도프는 “아베 총리는 의회 연설에서 일본의 행위가 아시아 사람들에게 고통을 줬다는 점을 인정했지만 위안부 문제는 ‘전임자들의 입장을 계승한다’는 정도로만 언급했다”며 “한국인들의 기대와는 거리가 먼 내용”이라고 지적했음.
 - 또한 연설 말미에 아베 총리가 한국을 ‘미·일 동맹이라는 중심 기둥의 추가적인 파트너’로 언급함으로써 한국을 동등한 상대가 아닌 하위 상대로 본다는 점을 피력하는 ‘큰 함정’을 파놓았다고 말했음. 이어 “총리 비판자들은 그의 의회

연설이 한일관계 진전의 기회를 날려버린 것이라고 안타까워할 수 있겠지만 이러한 안타까움도 관계 개선을 시작할 책임이 이제 박 대통령에게 있다는 사실을 바꾸지는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음.

- **日야당 ‘사죄’ 뺀 아베 총리 연설 비판…“역사인식 수정의도”(4/30, 연합뉴스)**
 - 식민지 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가 빠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29일(현지 시간) 미국 의회 연설에 대해 일본 야당에서 비판의 목소리가 나왔음.
 - 야마시타 요시키(山下芳生) 일본 공산당 서기국장은 아베 총리가 무라야마(村山) 담화(전후 50주년 담화)의 핵심인 식민지배와 침략에 대한 사죄 등 표현을 인용하지 않은 데 대해 “세계와 아시아 사람에 대한 메시지로 ‘마이너스’일 뿐”이라고 말했다고 교도통신이 보도했음.
 - 제1야당인 민주당의 오카다 가쓰야(岡田克也) 대표는 ‘앞선 대전(大戦)에 대한 통절한 반성(deep remorse)’, ‘자신의 행위가 아시아 여러 나라 국민에게 고통을 준 사실’, ‘역대 총리와 (생각이) 전혀 다르지 않다’ 등 아베 총리 발언의 의미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 발언이 그간 아베 총리가 국회에서 반복한 ‘무라야마 담화를 전체로서 계승한다’는 언급에서 한 걸음 나아간 것인지 아니면 변화가 없는지 국회에서 따져보겠다는 뜻을 밝혔음.
- **정부당국자, “아베 총리 연설 유감…국제사회 요구 부응해야”(4/30, 연합뉴스)**
 - 정부 당국자는 과거 제국주의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와 일본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 대해 “유감스럽다”고 밝혔음.
 - 이 당국자는 이날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일본이 주변국을 비롯한 국제사회의 요구에 부응해야 할 것”이라면서 이같이 말했음. 정부는 아베 총리의 역사인식과 관련해 우리뿐 아니라 국제사회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연설이라고 평가하는 것으로 전해짐.
 - 한편, 정부는 미 의회연설에서의 아베 총리에 대한 기대가 물거품이 됐지만 일본의 과거사 문제에 대한 올바르게 분명한 역사인식 표명을 지속적으로 촉구하겠다는 방침으로, 오는 6월 한일 국교정상화 50주년과 8월로 예상되는 종전 70주년 담화(일명 아베담화)를 계기로 일본에 대한 압박을 계속할 것으로 보임.

- 아베 총리, '침략사죄' 외면한 날 日박물관서도 '침략 삭제'(4/30,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국 의회에서 '침략 사죄'가 빠진 연설을 한 날(일본 시간: 30일 새벽), 일본의 대표적 전쟁 반성 박물관인 오사카 국제평화 센터(일명 피스 오사카)에서 '침략'이라는 표현이 삭제됨.
 - 오사카시 주오(中央)구의 전쟁 전쟁 박물관인 피스 오사카에서 30일 오전 마쓰이 이치로(松井一郎) 오사카부(府) 지사 등이 참석한 가운데, 재개장 기념 행사가 열렸다고 교도통신이 전함. 내부 개조를 거쳐 재개장한 피스 오사카에는 기존에 있던 일본군의 가해행위 전시와, 각종 게시물상의 '침략'이라는 표현이 사라지고 대신 2차대전 말기 연합군의 오사카 공습에 대한 전시 및 체험 공간이 그 자리를 채웠다고 교도는 전했다.
 - 이날 마쓰이 지사는 안내를 시찰한 뒤 "좋은 시설이 됐다"며 "내용에 만족한다. 아무것도 얻을 게 없는 것이 전쟁임을 실감할 수 있게 됐다"고 호평하면서, 그는 "일본의 패전이 보이는 와중에 무차별적으로 소이탄을 떨어뜨린 미국은 지나 쳤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함.

-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비서관, "대일외교, 과거사와 안보·경제는 구분"(5/1, 연합뉴스)
 - 청와대 주철기 외교안보수석비서관은 대일 외교 기조에 대해 "과거사, 안보와 문화·경제 이슈는 구분해서 다룬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라고 언급함.
 - 주 수석은 이날 국회 운영위 전체회의에서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대책을 묻는 새정치민주연합 안규백 의원의 질문에 "계속 견제를 하고 일본이 바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노력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 주 수석은 미·일 동맹의 격상으로 한국 외교가 고립됐다는 지적에는 "보이지 않는 가운데서 수시로 일본 측에 얘기하고 있고, 미국과도 수없이 접촉하고 있다"면서 "저는 피를 말리면서 매일 고민하고 하고 있다"고 답했음.

- 윤병세 외교부 장관, "아베 총리 올바른 역사인식 밝힐 황금기회 놓쳐"(5/1, 연합뉴스)
 - 윤병세 외교부 장관은 아베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의회 연설에 대해 "올바른 역사 인식을 밝힐 황금의 기회를 스스로 놓친 것은 안타깝다"고 밝혔다.
 - 윤 장관은 이날 국회에서 새누리당과 개최한 외교안보 당정회의에서 "한일 관계의 안정적 발전은 올바른 역사 인식에 기반해야 한다"면서 이같이 밝히며, 미일방위 협력 지침 개정으로 한반도의 안보가 위협받을 수도 있다는 지적에

대해 “우리의 사전 동의 없이는 어떤 경우도 자위대의 우리 영토 진입이 불가능하다”고 설명했다.

- 이어 한국 외교가 소외되는 것 아니냐는 관측에 대해서는 “중국과 건설적 협력 관계에 있고, 미국과 원자력협정을 개정하는 등 한미동맹을 업그레이드 하는 상황에서 과도한 해석”이라고 부연했음.

■ 일본 자민당 내 ‘우경화 반대’ 소장의원 모임 결성(5/2, 연합뉴스)

- 일본 집권당의 ‘온건파’ 소장 의원들이 7일 연구회를 결성한다고 마이니치(毎日)신문이 2일 보도함.
- 이들 의원 모임은 ‘역사수정주의적인 과잉 내셔널리즘을 배제하고 보수의 왕도(王道)를 걷는다’는 설립 취지서를 내걸고 온건한 보수야말로 자민당이 가야할 길이라고 호소할 예정임.
- 참가 자격은 당선 1~2회 중의원 의원과 2013년 참의원 선거에서 당선된 초선 의원들이며,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총리 등을 강사로 초청해 전후 70년에 대한 이해 등을 넓혀나갈 예정임.
- 발기인 가운데 한 사람은 “헤이트 스피치(특정 민족 또는 인종 등에 대한 차별 발언과 시위) 등 이웃국과의 대립을 부추기는 풍조에 대해 강한 문제의식을 갖고 있는 의원이 자민당에 있다는 것을 보여줘 보수(정치)에 대한 신뢰를 얻고 싶다”고 밝힘.

■ 무라야마 전 총리, “아베총리 ‘역사인식 계승’은 속임수”(5/2, 연합뉴스)

-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가 전후70년 담화와 관련해 역대 내각의 역사인식을 계승한다고 말하는 것은 속임수라고 지적함.
- 교도통신에 따르면 무라야마 전 총리는 이날 한 지방 방송사 프로그램에서 아베 총리가 울여름 발표할 담화에 대해 “역대 내각의 입장을 계승하니까 괜찮다고 속이려 한다면 보다 명확히 말하는 편이 낫다”고 비판하였음.
- 그는 또 아베 총리가 최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2차대전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표명하면서도 1995년 ‘무라야마담화’에 명기된 ‘식민지 지배와 침략’, ‘마음으로부터의 사죄’는 언급하지 않은 데 대해서는 “적당히 둘러대면서 은폐하는 듯한 인상을 주는 것은 오히려 불신을 키운다”고 지적함.

라. 한·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마. 미·중 관계

- 中소비자, 美군수품 인터넷 구매...“주한미군 방탄복도”(4/29, 연합뉴스)
 - 미국은 중국에 대한 무기 금수 조치를 해제하지 않고 있지만 중국인들은 인터넷을 통해 자유롭게 미국 군수품을 구매하고 있다고 미국의 소리(VOA) 방송이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를 인용해 보도했음.
 - 중국 소비자들은 중국 최대의 인터넷 쇼핑 사이트 타오바오(淘寶網) 등에서 미국 군복은 물론 특수전 훈련 가이드북에서 군용 망원경에 이르기까지 각종 미군 군수품을 구입할 수 있다고 VOA는 전하였음.
 - 방탄복이 주한 미군기지에서 유출된 것이라면 부정 경로를 통해 흘러나왔겠지만 중국 인터넷에 나온 미국 군수품은 상당수가 정식 경로를 거친 진짜로 보이는 것으로 전해짐. SCMP는 중국에 수출이 금지된 미국 군수품이 중국 인터넷에서 버젓이 팔리고 있는 현상도 아이러니한 일이지만 해당 군수품의 상당수가 중국에서 생산된 제품이라는 것이 더욱 우스꽝스럽다고 지적하였음.
- 中관영매체의 독설...“미국, 아시아인을 ‘뽕’으로 봐”(4/30,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동맹관계를 격상한 가운데 중국 관영매체가 30일 다시 독설에 가까운 비난 공세를 퍼부었음. 전날 사설에서 “미국과 일본이야말로 마음속에 헛된 욕심과 환상을 품은 나라들”이라고 비난한 인민일보 자매지 환구시보(環球時報)는 이날도 ‘미일 신방위지침은 아시아의 새로운 위협의 근원’이라는 제목의 사설을 게재했음.
 - 이 신문은 미일 신방위지침의 범위가 중일 간 영유권 분쟁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 열도, 남중국해 등을 포함한 ‘전 지구’라는 점을 부각하며 “이는 아시아 정치 환경에 근본적인 충격이 될 수 있다”고 경고했음.

- 또 “미국은 아시아를 더욱 혼란하게 만들고 동북아 내부모순을 더욱 확대하며 중일 대립을 부추기려는 것 같다”며 “패권 유지를 최우선 순위에 둔 미국에 아시아 안정은 결코 가장 중요한 사안이 아니다”고 덧붙임.

■ 중국방부, 美日 겨냥 “우리 능력 과소평가 말라” 경고(5/1, 연합뉴스)

- 중국군이 '대중 포위전략'의 일환이라는 분석이 나오는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우리 능력을 과소평가하지 말라"며 강력히 반발하였음.
- 미국과 일본은 아베 총리의 방문에 맞춰 최근 미일 행동반경의 세계화와 대중국 역지력 강화를 핵심으로 한 새 미일방위협력지침에 합의했음. 중국군이 새 미일방위협력지침에 공식 반응을 낸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앞으로 구체적인 반격 행보가 이어질 수 있어 동중국해와 남중국해 등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긴장이 더욱 고조될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오고 있음.
- 관영 영자지 차이나데일리 등에 따르면 경연성(耿雁生)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전날 열린 기자회견에서 “새 미일방위협력지침과 미일 국방장관의 ‘남중국해에서 국제규범을 준수하라’는 미일 국방장관 발언을 어떻게 평가하느냐”는 질문에 “우리는 이를 고도로 주시하고 있다. 그에 대해 세 가지를 강조하고 싶다”고 말했음.
- 경 대변인은 우선 “군사동맹은 과거의 유물로 평화 발전·협력 공영의 시대적 조류에 어긋난다”며 “미일 군사동맹 강화는 앞으로 (두 나라의) 안보협력 범위를 전 지구로 확대할 것이며 이것이 세계평화와 지역안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모두가 고도로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우려함. 또 “미일 동맹은 냉전이라는 특수한 역사적 배경에서 형성된 양자관계로 당연히 그 (협력) 범위는 양자관계로 제한돼야 하고 3자 이익을 훼손해선 안 된다”며 “군사동맹을 통해 터무니없이 군사력을 확대하려 하고 다른 나라 발전을 억제하며 자기 이익을 추구하는 방법은 헛수고가 될 것”이라고 비난함.
- 그는 특히 “중국은 국가영토 주권과 해양권익을 강력히 수호할 것”이라며 “우리는 관련 국가가 중국과 주변국가의 영토주권, 해양권익 갈등에 참견하는 것을 반대하며 그 누구도 정당한 권익을 지키려는 우리의 결심과 능력을 과소평가해선 안될 것”이라고 거듭 경고함. 그는 최근 실시된 남중국해에서의 미국-필리핀 대규모 합동군사훈련에 대해서도 긴장만을 불러 올 뿐 지역 평화와 안정에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비난함.

- 중국 해군사령관, “미국 등 남중국해 민간시설 사용 환영”(5/1, 연합뉴스)
 - 중국이 영유권 주장을 강화하고 있는 남중국해에서 자국이 건설한 민간 시설을 미국에도 개방할 수 있다고 밝힘.
 - 우성리(吳勝利) 중국 해군 사령원(사령관)은 조너선 그리너트 미국 해군 참모 총장과의 화상회의에서 남중국해 구조물 건설이 선박, 항공기의 운항을 방해하지 않을 것이라며 이런 입장을 설명했다. 중국 국방부 성명에 따르면 우 사령관은 남중국해 구조물이 “남중국해에서 일기예보, 해양탐사, 조난자 구조 같은 공공 서비스 역량을 강화할 것”이라며 “공해(公海)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해 국제적 의무를 다하겠다”고 말했다.
 - 또한, 그는 “조건이 맞는다면 앞으로 국제기구나 미국, 관련국가가 인도적 차원의 수색과 구조, 재난 구호에 협력하기 위해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환영한다”고 덧붙였다.

- 중국, 미국 사이버전략이 ‘인터넷 군비경쟁’ 부추겨(5/1, 연합뉴스)
 - 중국 국방부는 지난달 30일 사이버 무기를 사용해 보복능력을 개선시킨 미국의 최근 사이버전략이 인터넷 안보상황을 악화시킬 뿐이라고 우려를 표명했음.
 - 중국 국방부는 또 오는 9월에 예정된 제2차 세계대전 종전 기념 군사 퍼레이드에 대한 미 고위관리의 문제점 지적을 일축했다고 영국 일간 가디언이 보도하였음. 미 국방부가 마련한 신 사이버전략은 지난 2011년 것보다 사이버 전사들을 더욱 강력하게 만들었고 러시아, 중국, 이란, 북한으로부터의 위협을 전투대상으로 지목하고 있다고 이 신문은 전함.
 - 이와 관련, 쟁안생(耿雁生)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인터넷에 관한 한 세계 최고 기술을 보유한 미국이 새로운 전략으로 사이버안보상황의 긴장도를 높일 뿐이라고 비난하였음. 쟁 대변인은 “이 신전략은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인터넷 군비경쟁 비용을 증가시킬 것”이라며 미국은 사이버안보상황과 관련해 중국의 명예를 더럽히는 행위를 중단하라고 촉구했음.

바. 미·일 관계

- 미일정상회담서 ‘공동비전’ 발표…적에서 강고한 동맹으로(4/28,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워싱턴에서 정상회담을 개최한 뒤 강고한 양국 동맹을 강조하는 ‘미일 공동비전 성명’을 발표한다고 NHK가 보도하였음.
 - 성명 초안에는 2차대전에서 싸운 양국이 화해를 통해 강고한 동맹 관계를 구축, 아시아와 세계의 평화·번영에 기여하고 있는 점을 높이 평가하는 내용이 포함된다고 알려짐. 또 전날 양국 외교·국방장관이 합의한 새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에 대해, 미일동맹의 역지력을 강화하고, 타국과의 협력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평가하는 문구도 포함되었음.
 - 이와 함께, 아시아-태평양지역과 그 외 지역의 안정을 위해 미·일이 보다 긴밀하게 협력한다는 내용과 더불어 “힘에 의한 일방적인 현상 변경으로 주권과 영토의 일체성을 해치는 행동은 국제 질서에 대한 도전”이라는 문구도 포함되었음. 이는 중국과 러시아를 의식한 표현으로 풀이됨.
- 케리 미국 국무장관, “미일 가이드라인 개정, 역사적 전환점”(4/28, 연합뉴스)
 -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은 27일(현지시간)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에 대해 “역사적인 전환점”이라고 평가함. 케리 장관은 가이드라인 개정에 합의한 미일 외교·국방장관 연석회의(2+2·뉴욕) 후 뉴욕에서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이같이 말하고 “일본은 국제적으로 더 큰 역할을 하게 된다”고 밝혔음.
 - 그는 중국의 대두를 직접 거론하지는 않았지만, 새 가이드라인이 안보환경의 “큰 변화”를 반영했다고 소개한 뒤 항행의 자유 등을 방해하는 행위가 “대국의 특권이라는 생각을 거부한다”며 사실상 중국을 견제함.
 - 이어 케리 장관은 중일 영유권 갈등지역인 센카쿠(尖閣·중국어명: 다오위다오 <釣魚島>) 열도에 대해 미국은 “흔들림 없는 방위 의무가 있다”고 밝혔음. 또한, 회견에 함께 참석한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은 “견고한(미일) 동맹 관계가 지역 평화와 안정의 초석이 되고 있다”고 말하였음.

- 미일, NPT 공동성명서 “외교로 북핵 해결” 재확인(4/28,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는 정상회담을 시작하면서 발표한 ‘핵확산금지조약(NPT)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비핵화(CVID)를 달성하기 위한 외교적 절차에 계속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 양국 정상은 북한에 “2005년 6자회담에서의 공동선언에 따른 의무를 존중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실천하도록” 촉구했고, 이어 두 정상은 북한이 “관련된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안을 전적으로 준수하고, 핵실험이나 탄도미사일 발사 같은 추가 도발을 자제하며, NPT와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조치(세이프가드) 체제로 복귀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음.
 - 이 공동선언에서 두 나라 지도자들은 “핵무기 없는 평화롭고 안전한 세계와 NPT에 대한 공약을 재확인한다”고 가장 먼저 선언했음. 이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현재 뉴욕 유엔본부에서 진행되는 NPT 평가회의의 성공적 개최를 위해 노력하겠다는 뜻과, 핵무장 해제를 위한 단계적 접근법에 대한 지지를 다짐함.

- ‘아베 총리의 두 얼굴’...과거사 사과없이 추모시설 눈도장(4/28, 연합뉴스)
 - 미국 방문 이틀째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7일(현지시간) 버지니아 주 알링턴 국립묘지와 워싱턴DC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차례로 방문하였음.
 - 그는 일본군 위안부 동원, 식민지배, 침략 등 자국의 과거 행위는 사과하지 않으면서 타국의 전쟁 관련 추모시설을 찾아 ‘역사를 기억하자’거나 ‘평화를 지키자’는 메시지를 은연중에 강조하였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2차 대전 때 리투아니아에서 일본 외교관으로 근무했던 스기하라 지우네(杉原千畝) 씨로부터 비자를 발급받아 목숨을 건진 유대인 3명을 홀로코스트 박물관에서 만나 일본인의 역할을 강조하는 기회로 활용한 것으로 보인다고 전하였음.
 - 아베 총리의 이번 전쟁 관련 추모시설을 방문을 놓고 ‘과거사 물타기’ 시도가 아니냐는 분석과 함께, 특히 미국 여야 의원과 주류 언론, 시민단체의 압박에도 침략 전쟁이나 위안부 강제 동원을 사과하지 않는 상황에서 이뤄진 홀로코스트 방문에 대해 ‘이중적’, ‘두 얼굴’ 등의 비판이 나오고 있음.

- 미국-일본, “힘에 의한 현상변경 반대”...중국 견제(4/29, 연합뉴스)
 - 미국과 일본은 28일(현지시간) 정상회담을 열어 새로운 방위협력지침과

- 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TPP)의 조기 체결을 통해 양국의 안보·경제협력을 격상하고 글로벌 도전 과제에 대처하기 위한 파트너십을 강화해 나가려 했음.
- 양국은 특히 아시아 역내에서 중국의 패권확장 기도를 견제하려는 듯 ‘힘에 의한 현상 변경’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는 한편 동맹의 격상을 통해 일본이 군사적 행동을 확대하고 재무장을 강화하기로 함. 그러나 이러한 양국 정상회담의 합의는 아베 신조 총리가 과거 일본의 식민지배와 위안부 등 전시인권 문제 등에 대해 사과한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하지 않고, 평화헌법을 교묘히 무력화하는 등 역사 퇴행적 행보를 보이는 가운데 나온 것이어서 한국 등 주변국의 우려를 사기에 충분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음.
 - 두 정상은 특히 “힘이나 강압에 의해 일방적인 현상 변경을 시도함으로써 주권과 영토적 주권과 영토적 통합성을 저해하는 국가의 행동들은 국제질서에 대한 도전이 되고 있다”고 밝히고 “이 같은 위협들은 우리가 구축해온 많은 것들을 위협에 빠뜨리고 있다”고 지적하며, 특히 “해양안보를 포함한 이슈들에 대해 보다 긴밀히 협력해나가기로 했다”고 강조하였음. 이는 해양 진출을 강화하는 중국을 적극적으로 견제하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미·일, 5월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하자(4/29, 연합뉴스)

-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군사동맹의 격을 높인 미국과 일본이 곧바로 한미일 3자 공조 복원에 나섰다.
- 미국과 일본은 28일(현지시간) 미국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국방장관 회담에서, 내달 싱가포르에서 열리는 아시아안보장회의(일명 상그릴라 대화)를 계기로 삼아 한미일 3국 국방장관 회담을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고 교도통신이 29일 보도했음.
- 애슈턴 카터 미국 국방장관과 나카타니 겐(中谷元) 일본 방위상은 북한 핵무기와 미사일에 공동대처하는 차원에서 한국에 3국 국방장관회담 개최를 제안하는 방안에 의견일치를 봤다고 교도는 전하였음. 나카타니 방위상은 회담에서 “북한의 핵·미사일 개발은 일본에 대한 위협”이라며 “한국과의 협력이 중요하다”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을 제안하였고, 이에 대해 카터 장관은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다”며 호응함.

- **미일 정상, 미군기지 현 내 이전 확인...오키나와 반발(4/29, 연합뉴스)**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과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정상회담에서 일본 오키나와(沖縄)현의 미군 기지를 현 내부에서 이전한다는 방침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반발이 일고 있음.
 - 교도통신에 따르면 아베 총리가 후텐마(普天間) 미군 비행장을 헤노코(邊野古) 연안으로 옮긴다는 계획을 회담에서 명확히 한 것에 관해 오나가 다케시(翁長雄志) 오키나와 지사는 기자회견에서 “강한 분노를 느낀다”고 말하며, 오나가 지사는 “모든 수단을 이용해 헤노코에 새로운 기지를 만들지 못하게 하겠다”고 저지 방침을 재확인함. 그는 다음 달 하순에 미국을 방문해 후텐마 기지를 헤노코로 옮기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미국 정부에 직접 전하겠다고 뜻을 밝혔음.
 - 오나가 지사는 일본 정부가 오키나와 측에 약속한 후텐마 비행장의 5년 내 사용 중단이 미국과 일본의 외교·방위 각료(2+2) 회담의 공동 문서에 명시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며 약속이 결국 공수표였던 것으로 보인다고 꼬집었음. 그는 다음 달 하순에 미국을 방문해 후텐마 기지를 헤노코로 옮기는 것에 반대한다는 의사를 미국 정부에 직접 전하겠다고 뜻을 밝혔음.

- **미 의회 아베 총리 고강도 비판...위안부 책임회피 부끄럽고 충격적(4/30, 연합뉴스)**
 -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을 사과하지 않은데 대해 의회에서 강도 높은 비판의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음. 하원의 외교 수장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과 하원 외교위 민주당 간사인 엘리엇 앵겔(뉴욕) 의원, 2007년 하원의 ‘위안부 결의안’을 주도한 마이크 혼다(캘리포니아) 하원의원을 비롯한 친한파 의원들이 일제히 나서 ‘핵심’이 빠진 아베 총리의 연설을 비판했음.
 - 로이스 외교위원장은 보도자료를 내고 “오늘 캘리포니아의 장인상에 참석하느라 아베 총리의 연설에 참석할 기회를 갖지 못했다”며 “아베 총리가 동아시아의 외교관계를 악화시키는 과거사 문제를 적절하게 다룰 기회를 활용하지 못해 매우 실망스러웠다”고 밝히며 “나는 위안부 피해자들이 여전히 느끼는 상처가 얼마나 깊은지, 그들이 얼마나 사과를 원하는지 안다”며 “아베 총리는 이번 연설을 2차 세계대전 당시 성노예로서의 고통을 겪은 이들에게 사과하는 기회로 활용했어야 했다”고 강조했다.

- 앵겔 의원은 이날 아베 총리 연설 직후 낸 성명에서 “아베 총리가 이전 총리들의 입장을 승계한다고 하면서도 위안부 문제, 특히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본회의장 갤러리에서 연설을 지켜보는데도 직접적으로 사과를 하지 않았다”면서 “아베 총리가 제국주의 일본군대가 저지른 전쟁범죄에 대해 좀 더 직접적으로 언급했어야 한다는 점에는 의심의 여지가 없다”고 지적했음.
- 미 국무부, “위안부=극악한 인권침해 입장’ 변함없다”(4/30, 연합뉴스)
 - 미국 국무부는 29일(현지시간) 일본군 위안부 문제와 관련, “성(性)을 목적으로 한 여성의 인신매매에 대한 미국 정부의 입장에는 변함이 없다”고 밝힘.
 - 미 국무부 관계자는 이날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위안부 강제동원에 대해 사과하지 않은 데 대한 미 정부의 공식 입장을 물은 연합뉴스의 이메일 논평 요청에 이같이 답변함. 이는 위안부 강제동원을 부정하고 책임을 회피해 온 아베 총리가 이날 의회 연설에서도 위안부 단어 자체를 언급하지 않음으로써 기존과 같은 입장을 유지한 상황에서 미 정부가 위안부 범죄의 본질을 다시 한 번 분명히 한 것이어서 주목됨.
 - 국무부는 이어 아베 총리가 의회 연설에서 ‘역대 총리의 관점 계승’ 방침을 보이면서도 ‘고노담화’나 ‘무라야마 담화’에서 언급된 ‘식민지배’나 ‘사죄’ 단어를 직접 언급하지 않았다는 지적에는 “아베 총리가 역대 총리들에 의해 표현된 관점을 계승한다고 한 발언을 주목한다”고만 밝혔음.
- ‘전범용의자 출신 총리’ 기시 전 총리, 아베 총리 연설서 화려한 ‘부활’(4/30, 연합뉴스)
 - 태평양 전쟁 A급 전범 용의자였다가 훗날 일본의 총리를 지낸 기시 노부스케(岸信介·1896~1987) 전 총리가 29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총리의 미국 연방 상·하원 합동회의 연설에서 미일동맹의 ‘원조’로 화려하게 부활했음.
 - 아베 총리는 외조부인 기시 전 총리의 58년 전 미 의회 연설을 인용하는 것으로 연설을 시작하였음. 아베 총리는 “일본이 세계의 자유 국가와 협력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원칙과 이상을 확신하기 때문”이라는 기시 전 총리의 1957년 미 의회 연설 내용을 소개하고서, 그로부터 58년 뒤 손자인 자신이 같은 무대에 선 사실을 거론했음.
 - 또한, “돌아보건대 내가 진심으로 좋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일본이 올바른 길을 택한 것”이라며 “그 길은 연설 앞부분에 소개한 조부의 말에 있었던 대로 미국과

동맹이 되어 서방세계의 일원이 되는 선택을 한 것”이라고 부연했음.

- 바이든 미국 부통령, “아베 총리, 일본의 책임 명확히 했다”(4/30, 연합뉴스)
 - 조 바이든 미국 부통령은 29일(현지시간)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2차 세계대전에 대한 ‘통절한 반성’을 표명한 데 대해, 역사 문제에서 “책임이 일본 측에 있다는 것을 매우 명확히 했다”고 말했다고 교도 통신이 보도했음.
 - 미 상원의장이기도 한 바이든 부통령은 이날 아베 총리의 연설이 끝난 후 교도통신 등의 취재에 이같이 말했다. 그는 아베 총리 연설에 대해 “매우 능숙하고 의미 깊은 것”이었다고 평가했음. 바이든 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아베 총리의 역사 문제 언급을 오바마 정권 입장에서 평가하면서 동시에 일본의 ‘책임’에 언급 함으로써 한일, 중일 관계 개선을 위해 한층 더 노력할 것을 촉구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교도는 전했다.
 - 한편, 아베 총리는 미 의회 합동연설에서 2차 대전에 대한 반성은 표명했으나 ‘침략’, ‘사죄’ 등의 표현은 쓰지 않았으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도 언급하지 않았음.

- 전쟁기억 지우려는 ‘아베망각증’이 일본 평판 해쳐(5/1, 연합뉴스)
 - 2차 세계대전 당시의 기억을 의도적으로 지우려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이른바 ‘아베망각증(Abenesia)’이 일본의 국제적 명성에 악영향을 미친다고 미국의 아시아학 전문가가 지적함.
 - 제프 킹스턴 미국 템플대 도쿄 분교의 아시아학 소장은 미국 CNN방송 홈페이지에 기고한 칼럼에서 “종전 70주년을 맞은 올해 아베 총리는 전쟁 중 일본의 행위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는 데 모호하고 얼버무리는 태도를 보였다”고 지적하며, “이러한 ‘아베망각증’은 일본의 국제적 이미지를 해칠 뿐만 아니라 중국, 한국을 자극해 상호 안보 의제를 손상시킬 수 있다”고 말했다.
 - 킹스턴 소장은 지난 29일 아베 총리의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 내용을 인용하면서 “사과와 책임’ 부분은 전임자들에게 말김으로써 공감과 진정성면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다”고 평가하였음. 그는 “위안부 문제에 대해 얼버무려온 그간의 태도를 비춰볼 때 직접적인 사과를 하거나 일본 정부의 개입을 인정할 것이라는 예상은 애초부터 없었다”며 “그럼에도 아베 총리의 발언은 예상보다도 더

약했다”고 논평했음.

■ 일본, 미국내 ‘지일파’ 키우기에 270억원 투입(5/2, 연합뉴스)

- 주미 일본대사관은 최근 자체 홈페이지에 올린 보도문에서 일본 정부가 미·일 인적교류 프로그램인 ‘가케하시 이니셔티브’에 30억 엔(한화 약 270억 원)을 투입하기로 했다고 발표했다.
- 가케하시는 ‘가교’라는 뜻의 일본어로서 일본과 미국을 이어주는 ‘다리’ 역할을 한다는 의미이며, 이 이니셔티브는 고등학생과 대학생, 교사, 연구원, 의원, 문화계 인사들 간의 교류를 증진시키는 프로그램으로, 미국 내에서 일본에 우호적인 인사들을 길러내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 워싱턴DC의 한 소식통은 1일(이하 현지시간) “일본이 미국 내 지일파, 특히 차세대 지일파 키우기에 본격적으로 나서고 있다”며 “가케하시 이니셔티브와 같은 교류사업은 기존에도 있었지만, 이번에 대규모 일본 정부예산이 들어가면서 대폭 확장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일본의 이 같은 움직임은 미국 내에서 일본에 우호적인 여론을 조성하려는 공공외교 목적과 함께 미국 내에서 한국과 중국의 과거사 공세에 맞서 관련 연구와 저술활동을 하려는 의도로 해석되고 있음.

■ 미 외교위원장, “아베 총리, 8월 종전70주년 기념일엔 사과해야”(5/1, 연합뉴스)

- 미국 하원 외교 사령탑인 에드 로이스(공화·캘리포니아) 하원 외교위원장이 연일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과거사 부정을 강도 높게 비판하고 있음.
- 아베 총리가 29일(현지시간) 미 의회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일본군 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사과를 하지 않자 연설 직후 “매우 실망스럽다”는 내용의 성명을 냈던 로이스 위원장은 30일 한국 국회의원단을 만난 자리에서 다시 한 번 아베 총리의 그릇된 역사관에 일침을 가했음.
- 로이스 위원장은 한·미·일 의원협의회 참석차 미국을 방문 중인 새누리당 소속 나경원 외통위원장이 먼저 “아베 총리의 어제 의회 연설에 매우 실망했다”고 말하자 “나 역시 아베 총리가 이번 의회 연설을 역사 문제와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기회로 삼지 못한 데 대해 매우 실망했다”고 호응하며, 거듭 “지금 필요한 것은 바로 (아베 총리의) 진정한 사과”라고 언급하면서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처럼 역사를 정직하게 직시하는 것이 중요하다. 과거사에 대한 메르켈

총리의 접근법이 미래를 향해 나아가는 길을 보여주는 바람직한 접근법”이라고 말하였음.

사. 미·러 관계

- 특이사항 없음.

아. 중·일 관계

- 중국 해경, 센카쿠열도 부근에 함선편대 파견(4/30, 연합뉴스)
 - 중국은 30일 미·일 동맹에서 분쟁지역으로 새로이 부각된 센카쿠(尖閣.중국명 댜오위다오<釣魚島>)열도 부근해역에 함선 편대를 파견했음.
 - 중국 국가해양국은 30일 중국해경이 2307, 2101, 2102 함선편대를 댜오위다오 부근해역에 파견, 순찰 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밝힘.
 - 중국은 미·일 정상이 회담 후 공동 기자회견에서 센카쿠열도가 미·일 안보조약 적용 대상임을 재확인한 데 대해 강하게 반발하고 있음. 이와 관련,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29일 정례브리핑에서 “댜오위다오는 중국 고유의 영토로, 누가 무슨 언행을 하든 이 사실은 변하지 않는다”면서 “우리는 미국이 영토 문제에서 어느 한 쪽 편에 서지 않겠다는 약속을 준수하길 희망한다”고 언급함.
- 中, “침략역사 반성 약속 지켜야”...아베 총리 연설 비난(4/30, 연합뉴스)
 - 중국정부는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 군 위안부 문제에 대한 언급을 회피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미 상하원 합동연설에 대해 “침략역사 반성”을 촉구하며 비판함.
 - 홍레이(洪磊)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관련 질문에 “중국은 한결같이 일본정부와 지도자가 역사에 책임지는 태도로 (식민지배와 침략 전쟁을 인정하고 사죄한) 무라야마(村山) 담화에 포함된 침략역사를 직시하고 반성한 태도와 약속을 지킬 것을 촉구한다”고 말하며, 또 “오직 그렇게 할 때만

국제사회로부터 믿음을 얻을 수 있고 아시아 이웃국가들과 함께 미래로 향할 수 있는 우호적인 관계를 열 수 있다”고 덧붙였다.

- 한편, 홍 대변인은 미국과 일본이 아베 총리의 미국 방문을 계기로 동맹관계를 격상한 데 대해서도 “미일 동맹은 냉전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제3자의 이익과 지역안정을 훼손해서도 안 된다”며 다시 한 번 우려를 표명했음.

■ 아베 총리, “아태 지역엔 북한 위협 있어…중국 군비 확장도”(5/1,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미·일 방위협력지침(가이드라인) 개정이 북한과 중국에 대응하려는 성격을 지닌 것이라고 밝힘.
- 니혼게이자이신문에 따르면 아베 총리는 전날 방영된 니혼TV의 한 프로 프로그램에 출연해 새 가이드라인에 관해 “아시아·태평양에는 북한의 위협도 있다. 동시에 중국의 남중국해·동중국해 활동과 군비 확장도 있다”고 말했음.
- 아베 총리는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정세는 크게 변했다”며 “특히 안전보장 환경은 엄중함이 매우 늘어났다”고 부연했다. 또 “중동지역의 과격주의는 국경을 넘어 온다”고 지적하고서 “그런 것들에 확실하게 대응할 새로운 가이드라인은 만들었다”고 의미를 부여했음.

■ 중국 언론·전문가, 아베 방미 연설에 비판공세(5/1, 연합뉴스)

- 중국 관영 언론과 전문가들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방미 행보와 침략과 식민지배에 대한 사죄가 빠진 연설 등에 대한 비판의 수위를 높였음. 중국 관영 신화통신은 ‘아베의 오만과 미국 정치인들의 건망증’이란 제목의 칼럼을 통해 일본과 미국을 모두 비판했음.
- 아베 총리는 지난달 29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미국에는 사과하면서도, 위안부 문제는 아예 언급하지 않았고 과거 아시아 국가들에 대한 식민지배 가해에 대해서도 ‘사죄’라는 분명한 표현을 쓰지 않았음.
- 통신은 이를 두고 미국의 일부 의원과 민간단체들의 식민 지배와 위안부 문제에 대한 사과 요구를 아베 총리가 못 들은 체하거나 고의로 덮으려고 한 것이라고 비판하며, 아베 총리가 일본의 역사적 죄행을 미화하고 군국주의의 길을 걸으려는 오만함을 보였다고 목소리를 높였음.

- 중국 전문가, “종전70주년 아베 담화, 침략반성 없을 것”(5/3,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8월 15일 무렵 내놓을 제2차 대전 종전 70주년 담화(일명: 아베 담화)에서 결국은 침략전쟁에 대한 반성을 제외할 가능성이 크다고 중국의 일본 전문가가 전망했음.
 - 중국 외교부 주관으로 발행되는 외교학술지 ‘세계지식(世界知識)’ 최신호에 따르면 리웨이(李薇) 중국사회과학원 일본연구소 소장은 이 학술지가 최근 ‘전후 70주년, 일본은 진정으로 반성할 수 있을까’를 주제로 마련한 전문가 대담에서 “아베는 아마도 침략전쟁을 진정으로 반성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예상함.
 - 또한 “그의 전후 70주년 담화는 아마도 반성은 하면서도 사과는 하지 않는 비교적 모호한 담화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면서, 중국과 한국뿐 아니라 주요 7개국(G7) 등의 압박을 받는 상황에서 ‘침략전쟁이 아니었다’는 식으로 말하지는 않겠지만, ‘침략전쟁이었다’고 공개적으로 인정할 생각도 없을 거라는 분석임.

- 中 인민일보, “침략의 역사 회피 용납 못한다”...아베 총리 비난(5/3, 연합뉴스)
 - 중국 공산당 기관지 인민일보(人民日報)가 “침략의 역사 회피를 용납할 수 없다”는 제목의 기사로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의 과거사 인식에 대한 비난 수위를 높임.
 - 인민일보는 이날 3면에 게재한 장문의 기사를 통해 “아베의 발언과 주장이 국제사회의 강렬한 항의에 직면했다”면서 이같이 비판했으며, “아베 총리가 지난달 29일 미국 상하원 합동연설에서 침략의 역사와 위안부 문제에 대해 사과하지 않았다”면서 이에 대해 국제적 여론과 전문가들 사이에서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고 전함.
 - 신문은 이어 한국과 러시아, 미국 등 각국 전문가들이 아베 총리의 행보를 비판하고 있다고 소개한 데 이어 무라야마 도미이치(村山富市) 전 일본 총리를 비롯해 일본 내부 인사들 사이에서도 아베의 과거사 역주행 행보를 비판하는 의식 있는 목소리가 잇따르고 있다고 전함.

자. 중·러 관계

- ‘찰떡행보’ 중국-러시아…“달 기지 공동건설도 검토”(5/2, 연합뉴스)
 - 미국의 중국 견제와 서방의 대러 제재 속에서 더욱 친밀한 행보를 보이는 중국과 러시아가 월면 기지 건설을 포함한 우주개발 협력을 가속하는 방안도 검토 중임.
 - 환구시보(環球時報)가 러시아 일간 모스크바 타임스를 인용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드미트리 로고진 러시아 부총리는 지난달 28일 항저우(杭州)를 방문해 러시아의 월면 연구기지 건설 사업에 중국을 시작 단계에서부터 동반자로 참여시키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러시아는 월면 연구기지 건설을 위해 2050년까지 12조 5천만 루블(약 262조 원)을 투자한다는 계획을 세워놓고 있음.
 - 또 로고진 부총리는 중러 양국이 개발한 독자적인 위성위치확인시스템(GPS)인 베이더우(北斗)와 글로나스 시스템의 협력 문제에 대해서도 논의 중이라고 언급함. 이에 대해 환구시보는 러시아가 최근 외교 무대에서 중국에 군사, 항공우주기술을 개방할 것이라는 신호를 잇달아 보내고 있다고 분석함.

차. 일·러 관계

- ‘전승행사 못가서 유감’…아베 총리,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 친서(4/30, 연합뉴스)
 -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러시아 모스크바에서 내달 9일 열리는 제2차 세계대전 대(對) 독일 승전 70주년 기념식에 참석하지 못한다는 내용의 친서를 블라디미르 푸틴 러시아 대통령에게 보냈음.
 - 일본 정부 대변인인 스가 요시히데(菅義偉) 관방장관은 30일 기자회견에서 이 같은 사실을 공개함. 일본 정부는 아베 총리의 방문을 보류하는 대신 하라다 지카히토(原田親仁) 러시아 주재 일본대사를 참석시키기로 결정했음.
 - 정부는 초청을 받은 아베 총리가 불참하는 이유에 대해 미국 방문을 마치고 귀국하면 국회 대응 등으로 일정 잡기가 너무 어렵다고 설명했지만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대립 중인 미국의 입장을 감안한 결정으로 해석됨.

© 국제전략연구실 제공

Ⅲ. 북한 인권 동향

1. 북한 내부 실상 및 대내외 동향

- 북한, 탈북자 단체장들 시리즈로 비방 공격(4/27, 연합뉴스)
 - 북한이 최근 대남선전용 웹사이트 ‘우리민족끼리’를 통해 탈북자 단체장들을 한 명씩 거론하며 비방하는 기획 시리즈물을 내보내고 있음.
 - 우리민족끼리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달 27일까지 ‘쓰레기는 제때에 쓸어 버려야 한다’는 제목으로 모두 10편의 기획물을 보도하며 탈북자 단체장들에 대한 인신공격성 비난을 쏟아냈음.
 - 북한은 최근 대북전단을 살포한 박상학 자유북한운동연합 대표, 리민북 북한동포직접돕기운동 대북풍선단장, 탈북자 출신 조명철 새누리당 의원 등에 대해 북한에서의 생활과 인격을 악의적으로 묘사했음.
 - 지난해에도 ‘탈북자, 너는 누구냐’라는 비방 시리즈를 내보냈던 우리민족끼리는 올해 강철호 탈북민자립센터 소장, 정광일 북한민주화운동본부 인권조사실장 등을 비방자 명단에 새로 추가했음.
 - 북한이 탈북자 비방전의 대상을 개인에서 단체들로 옮기고 있는 경향을 드러낸 셈임.
 - 이런 비방전은 탈북자들에 대한 배신감과 함께 국제사회가 북한 인권문제의 국제형사재판소(ICC) 회부를 요구하는 유엔 인권결의안을 통과하는 등 인권공세의 고삐를 바짝 조이는 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됨.
 - 더구나 유엔 인권결의안의 발단이 된 탈북자 신동혁씨가 올해 초 일부 거짓증언을 고백하자 북한은 이에 힘입어 인권결의안 철회를 요구하는 한편 탈북자 단체장들에 대한 비난과 인신공격을 통해 신뢰도를 깎아내리는 데 주력하는 모양새임.

- 미 보고서 “북한, 테러지원국 재지정해야”(4/28, 미국의소리)
 - 미국 비정부기구인 북한인권위원회(HRNK)의 조슈아 스탠턴 변호사가 27일 ‘테러의 무기고’라는 제목의 보고서를 발표했다.
 - 북한이 테러지원국 명단에서 빠진 2008년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테러를 직접 시도하거나 지원했다며 관련 증거를 조목조목 나열했음.

- 2009년 이란으로 향하던 북한 선박 몇 척이 적발된 사례를 들어 북한이 이란의 지원을 받는 테러단체에 무기를 공급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 북한 선박에 있던 무기들이 미국 국무부가 테러단체로 지정한 헤즈볼라와 하마스를 포함해 이란이 지원하는 테러단체로 흘러 들어갔다는 것임.
 - 이어 천안함 폭침과 연평도 포격, 대북 전단 살포에 대한 타격 등 직접적인 군사공격은 물론, 한국이나 중국 등지에서 활동하는 탈북자와 인권운동가들에 대한 암살 기도와 납치 등의 행적도 북한이 가하는 심각한 위협으로 명시했음.
 - 아울러 지난해 말 소니 영화사 해킹 사건을 비롯해 한국의 금융기관과 웹사이트, 언론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도 북한의 소행이라고 지적했음.
 - 특히 테러지원국을 정의하는 기준이 모호하고 모순적이라고 지적하면서 미국 의회와 국무부는 테러지원국 기준을 명확히 하고, 북한을 다시 지원국 명단에 올려야 한다고 주장했다.
 - 그레그 스칼라튜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은 보고서 공개와 함께 발표한 성명에서 2008년 이후 북한은 국가정책의 수단으로 테러 사용을 늘려왔으며 테러조직으로 지정된 단체에 대한 물질적 지원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음.
 - 또 최근 북한의 움직임은 인권운동가나 망명한 반체제 인사들에 대한 위협을 내포하고 있으며,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다른 나라의 주민들도 반복적으로 위협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 북, 무차별 단속에 주민들 격앙(4/28, 자유아시아방송)
- 노동당 창건 70돌을 맞이하면서 수많은 건설공사를 벌여놓은 북한이 심각한 노동력 부족에 허덕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 모자라는 인력보충을 위해 무차별적인 길거리 단속을 일삼고 있어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소식통들은 지적했다.
 - 23일 함경북도의 한 소식통은 “길거리 곳곳에 ‘규찰대’가 배치돼 오가는 주민들을 마구잡이로 단속하고 있다”며 “무직자와 초상휘장(배지)을 달지 않은 사람, 특히 종대바지(착 달라붙는 바지)와 염색머리를 한 주민들이 주된 단속대상”이라고 밝혔음.
 - 일단 ‘규찰대’는 노년층 위반자일 경우 현장에서 조서를 작성하고 1시간정도 길거리에 세워두는 체벌로 끝내지만 젊은 층이 단속에 걸릴 경우 무조건

- ‘어랑천발전소’ 제2단계 공사장에 보내 7일간의 무보수 강제노동을 시킨다고 그는 덧붙였다.
- 특히 무직자인 경우에는 단속에 걸리면 최고 6개월까지의 ‘노동단련대’ 형을 받고 제일 힘든 건설장들에 동원돼야 한다며 “사실상 ‘규찰대’의 단속에 걸리기만 하면 흠이 잡히지 않을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고 소식통은 이야기했음.
 - 이와 관련 함경북도의 또 다른 소식통은 “이번 단속은 ‘태양절(4/15)’과 ‘건군절(4/25)’을 맞으면서 정해진 ‘특별경비기간’에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며 “청진시의 경우에만 보통 하루 천명이 넘는 사람들이 단속되고 있다”고 전했다.
 - ‘특별단속’에 나선 ‘규찰대’는 기존부터 활동해온 청년동맹산하 ‘노동자규찰대’와 ‘인민보안부 순찰대’ 그리고 새로 조직된 여성동맹의 ‘옷차림규찰대’인데 이들은 ‘인민보안부 순찰대’와 합동으로 주민들을 통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북 공개처형 장면, 위성사진에 포착”(4/29, 자유아시아방송)
- 2014년 10월 7일, 위성사진에 포착된 평양 인근의 강건 종합군관학교의 넓은 공터의 한가운데에는 ZPU-4 대공포 6대가 나란히 배열돼 있고, 그 뒤에는 이를 지켜볼 수 있는 장소가 보이는데, 이는 실제 공개처형이 진행되는 상황이 위성사진에 포착된 것임.
 - 자유아시아방송에 위성사진과 분석자료를 제공한 미국 북한인권위원회의 그레그 스칼라튜 사무총장은 “이는 대공포로 공개처형을 하는 장면이며, 100% 확실하다”고 강조했다.
 - 스칼라튜 사무총장과 상업위성사진 분석업체인 ‘ASA(AllSource Analysis)’의 조셉 버뮤데즈 박사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7일, 강건 종합군관학교에서 평소와 다른 모습이 포착됐는데 줄지어 세워진 처형 대상자(target)를 앞에 두고 약 30m 떨어진 거리에 ZPU-4 대공포가 배치됐으며 그 뒤로는 트럭, 트레일러, 버스 등이 서 있음.
 - 그리고 며칠 뒤인 10월 16일에 촬영된 위성사진에는 같은 장소에 그 어떤 것도 보이지 않아 7일 당시 공개처형을 위한 특별한 활동이 있었음을 짐작케 함.
 - 실제로 지난해 10월, 일본의 언론 매체인 ‘아시아프레스’가 보도한 내용에

- 따르면 평양에서 10월 초순 노동당 간부 12명에 대한 집단 총살이 있었음.
- 당시 보도에는 10월 6일 노동당의 중앙당 과장 3명과 부하 7명 등 총 10명이, 그리고 11일에는 당 간부 두 명이 평양의 강건 종합군관학교 훈련장에서 총살됐으며 총살 당시 기관총이 사용된 것 같다고 취재협력자는 설명했다.
- 이런 가운데 한국의 국정원은 지난 29일, 김정은 제1위원장이 올해 들어 고위관리 15명을 처형했다고 밝혔다.
- 또 국정원은 2012년에 17명, 2013년에는 10명에 이어 지난해에는 처형된 고위관리가 41명에 이른다고 김 제1위원장의 공포정치가 계속되고 있다고 해석했다.

■ 북, 뉴욕 유엔 북한대표부 인권담당 교체(5/1, 자유아시아방송)

- 북한 당국이 뉴욕 유엔본부에서 북한 인권 문제를 전담할 인사를 최근 전격 교체했다.
- 유엔 북한대표부의 인권 문제 담당자로 최근 부임한 관리는 이성철 참사로, 지난달 30일 유엔주재 미국 대표부 주최로 열린 북한 인권 토론회에서 무질서한 회의 참여로 행사장을 아수라장으로 만든 인물임.
- 유엔 내외 복수의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 외무성 출신인 이 참사는 이달 초 평양으로 소환된 김성 참사의 후임으로 부임했으며, 지금까지 김 참사가 맡아오던 인권 문제를 담당함.
- 김성 참사는 유엔에서 인권, 사회, 경제 문제를 다루는 제3위원회를 담당해 왔으며 특히 지난해 유엔 인권조사위원회(COI)의 최종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유엔의 각종 공식, 비공식 회의에서 북한의 입장을 대변해 왔음.

■ “訪北 中대방, 무심코 휴대폰하다 3000위안 벌금”…소식통 “北당국, 정보 유출 차단위해 전화사용 통제…제한된 장소에서만 허용”(5/3, 데일리안)

- 북한이 북중 대방(무역업자)들이 반(反)공화국 정보입수 및 유출을 하고 있다고 보고 이들의 입국을 제한하고 있는 가운데, 입국한 대방들에 대해서도 휴대폰 사용을 엄격히 통제하고 있는 것으로 전했다.
- 중국의 한 대북 소식통은 “최근 북한 당국은 입국한 무역업자들이 휴대폰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조치를 취해왔다”면서 “아예 못 쓰게 하는 것은 아니었지만, 지정된 장소에서만 사용하라고 강제하고 있다”고 전했다.

- 이어 소식통은 “북한에 들어갈 때부터 (국가안전)보위부로 보이는 인물이 다가와 해관(세관)에서는 휴대폰을 절대 사용할 수 없다고 했다”면서 “지정된 장소가 아닌 곳에서 휴대폰을 사용하다 적발되면 그 어떤 처벌도 가할 수 있다는 말들도 엄포를 놓았다”고 덧붙였다.
- 소식통에 따르면, 북한이 휴대폰 사용을 허가한 장소는 극히 제한된 지역이다. 대방들이 자유롭게 통화할 경우,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기 쉽기 때문에 이를 막기 위해 북한 당국이 특정지역에서의 통화만 허용했다는 것임.

2. 북한 인권

- 유럽 70여개 NGO들 북한인권운동 연대활동 추진(4/29, 연합뉴스)
 - 유럽의 70여개 비정부기구(NGO)들이 북한 인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연대 활동을 추진하고 있다고 전했다.
 - 영국의 인권단체인 유럽북한인권협회(EAHRNK) 관계자는 “유럽 각국 NGO와 논의를 통해 대북인권 활동을 ‘범유럽지역 운동’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 그는 이어 독일 북한인권단체 ‘사람’과 ‘헤코’ 등 최근 70개가 넘는 유럽 NGO와 접촉하고 협력 강화를 위한 논의를 했다며 계속해서 추진 방안을 모색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 현재 범유럽지역 북한인권운동 연대 구상에는 독일 외에도 네덜란드, 프랑스, 노르웨이 등 다양한 NGO들이 관심을 보이는 것으로 전해졌다.
 - 북한인권법 통과가 10년째 국회에서 통과하지 못하고 있는 것과 관련, 북한인권단체들이 미국을 방문해 북한의 인권실상을 폭로하고 북한인권법 제정의 필요성을 알리기 위해 나서 주목받고 있음.
 - 이들은 워싱턴DC와 보스턴 등을 방문하고 세미나를 비롯, 미국 시민들이 참여하는 집회와 거리행진도 진행할 예정임.
 - 북한인권법통과를위한모임(NANK, Now! Act for North Koreans)는 오는 26일부터 다음달 2일까지 워싱턴DC에서 진행되는 ‘제12회 북한자유주간’에 참여 중임.

- 미국 전문가들 “대북 인권압박 지속하면 벽 무너져”(4/29, 연합뉴스)
 - 북한 정권의 인권 탄압에 대한 문제 제기가 핵문제에 비해 다소 부차적이거나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인식이 있지만, 인권문제를 계속 제기해야 북한의 인권 탄압이라는 장벽을 무너뜨릴 수 있다고 미국의 북한문제 전문가들이 지적했음.
 - 미국의 인권변호사 제러드 겐서는 28일 정책연구기관 헤리티지재단이 개최한 북한 인권문제 토론회에서 “북한 주민들이 고통받고 있음을 알면서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며 이같이 말했음.
 - 토론자로 참석한 이성윤 미국 터프츠대 외교전문대학원(플레처스쿨) 교수는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발표된 이후 줄곧 부인만 하던 북한의 태도가 바뀌었다”며 같은 입장을 보였음.
 - 함께 참석한 미국 비정부기구 북한인권위원회(HRKNK)의 로버타 코언 공동위원장 역시 인권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하는 일이 “북한 정권을 흔들 공포의 지진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 전문가들은 단순히 북한 정권의 최고위층 인사 몇 명이나 조직 몇 개를 제재 대상으로 지정하는 차원을 넘어서, 정치범 수용소를 운영하는 실무 책임자들의 신상을 파악해 제재 대상으로 삼는 등의 방법도 고려해야 한다고 제안했음.
 - 코언 공동위원장은 북한에서 반인도적 행위를 한 실무 책임자들이 “장래에 처벌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을 갖게 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고, 겐서 변호사는 “이 사람은 어떤 수용소에서 어떤 일을 했다는 구체적인 기록을 남겨야 한다”는 의견을 냈음.
 - 또 전문가들은 북한에서 활동하는 유엔 산하기구나 비정부기구들에 대한 주요 기부자들을 대상으로 북한 인권문제 제기의 중요성을 일깨울 필요가 있다고도 지적했음.

- 킹 특사 “북한 당국, 해외 파견 근로자 착취…국제의무 위반”(4/30, 미국의소리)
 - 미 하원 톰 란토스 인권위원회가 29일, 강제노동에 시달리는 북한 해외 파견 근로자들에 관한 청문회를 개최했음.
 - 워싱턴에서 열리고 있는 북한자유주간 나흘째 행사로 열린 이날 청문회에서 미 국무부의 로버트 킹 북한인권특사는 해외에 파견된 북한 근로자들의 상황이 우려할 정도로 열악하다고 말했음.
 - 해외 파견 북한 근로자들은 가족들이 북한에 남아 있기 때문에 북한 당국의

통제를 받을 수 밖에 없고, 마음대로 일자리를 바꿀 수도 없는데다 임금의 극히 일부분만 받는 등 극도로 착취를 당하고 있다는 것임.

- 킹 특사는 북한 당국이 세계인권선언이나 국제노동기구 ILO의 노동규정 등 국제적 의무를 명백히 위반하고 있다고 지적했음.
- 이어 미국 정부가 북한 해외 근로자들이 처한 상황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대책을 세우기 위해 노력하고 있지만 관련 정보를 얻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라고 말했음.
- 킹 특사는 또 북한 근로자들이 해외에서 일하는 것은 유엔 안보리 제재 위반에 해당되지 않는다면, 하지만 미국 정부는 재무부를 중심으로 북한 근로자들이 벌어들인 돈을 북한으로 가져가는 것이 제재 위반에 해당되는지 면밀히 주시하고 있다고 말했음.

■ 파워 미 유엔대사, “국제사회, 대북 인권 압박 강화해야”(5/1, 미국의소리)

- 30일 미국 뉴욕의 유엔본부에서는 미국과 한국 주최로 탈북자 간담회가 열렸음.
- ‘희생자의 목소리: 북한 인권 대화’라는 주제로 열린 이날 간담회에는 탈북자 조셉 김, 조진혜, 김혜숙 씨가 참석해 북한에서 겪은 고통을 증언했음.
- 행사를 주최한 사만다 파워 유엔주재 미국대사는 탈북자들이 지나간 고통을 다시 기억하면서 힘들게 경험담을 나눈 것에 대해 크게 감사한다고 밝혔음.
- 파워 대사는 탈북자들의 경험에는 세 가지 주제가 공통적으로 담겨 있다며, 극도의 배고픔, 북한 당국의 공포정치, 강제송환이 그 것이라고 지적했음.
- 또 “북한 내부의 진정한 대량살상무기는 당국의 주민에 대한 처우와 생명 파괴”라고 강하게 비난했으며 “탈북자들에게만 증언의 짐을 지울 수는 없다”며 “나머지 사람들은 탈북자들의 목소리가 유엔과 안전보장이사회 등에서 크게 울려 퍼지도록 도와야 한다”고 말했음.
- 파워 대사는 국제사회가 “북한 정권에 대한 압력을 더욱 높여, 인간의 가장 기본적인 권리와 존엄성을 강탈하는 체제를 끝내야 한다”고 지적했음.

■ 전국 35개大 北인권행사 마쳐…“北인권법 통과돼야” 탈북자 간담회, 특강 등에 관심…관계자 “北인권 실태 전파에 좋은 계기”(5/1, 데일리NK)

- 한국의 35개 대학에서 진행된 ‘대학생 북한인권주간’ 캠페인이 1일 막을 내림.
- 올해 4회차를 맞는 ‘북한인권주간’ 행사는 지난달 27일 한림대를 시작으로

고려대, 숙명여대, 전북대 등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북한인권 실태 사진전, 탈북자 간담회, 북한인권 특강,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엽서보내기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됐음.

- 지난 28일 부산 광안리 만남의 광장에서 ‘북한인권법 통과를 위한 대학생 문화공연’을 진행한 손양모(24·부경대) 씨는 “(비가 오는) 곳은 날씨에도 불구하고 행사에 참여한 대학생들과 동아리원들은 북한인권법에 대해 한명의 시민에게라도 더 알리고 싶어한다”며 “보다 많은 사람들이 북한인권 상황을 알게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고려대학교 세종캠퍼스에서 진행된 북한인권 사진전에는 약 300명의 학생들이 참여했고, 특강에는 60여 명의 학생들이 참석하는 등 큰 호응을 이끌었음.
- 김우섭 고려대학교 북한인권동아리 UNIS 회장은 “북한인권 실태를 학생들에게 알리고, 북한인권법의 필요성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좋은 기회였다”고 전했으며, “다만 여전히 많은 학생들이 북한인권 실태에 관심을 두지 않는 현실이 안타깝다”며 “이번 행사가 일회성이 아닌 지속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일 것”이라고 밝혔음.
- 행사를 총괄한 문동희 전국대학생북한인권협의회 대표는 “유엔과 전세계 NGO들을 중심으로 한 북한인권개선 활동이 많아지며 국내 대학생들의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며 “이와는 반대로 우리 국회는 여전히 북한인권문제에 무관심하다. 대학생들의 열정과 노력이 국회에 전달돼 하루빨리 북한인권법이 통과되기를 바란다”고 말했음.

■ ‘북한 인권’ 행사에서 북한 대표들 ‘추태’(5/1, 연합뉴스)

- 북한의 유엔대표부 직원들이 30일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북한 인권’ 관련 행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국제적인 추태를 보였음.
- 미국 유엔대표부와 한국 유엔대표부가 탈북자들의 증언을 통해 북한의 인권 상황을 고발하기 위해 마련한 행사는 북한 대표부 직원들의 ‘막무가내’ 식 행동으로 말미암아 10분가량 중단됐음.
- 북한 대표부 직원들의 돌출 행동은 첫 번째 증언자인 조지프 김(25)의 발언이 끝난 직후 나왔음.
- 조지프 김의 발언이 끝나자마자 연단 아래에 앉아 있던 이성철 참사관은 발언권을 청하지도 않은 채 미리 준비한 성명서를 읽어 내려갔음.

- 연단 주위에 앉아 있던 다른 탈북자들이 “중단하라”며 고함을 질렀지만, 이에도 아랑곳하지 않았으며 성명을 모두 읽고서 퇴장했음.
- 이들의 성명 내용은 ‘탈북자들은 조국을 버린 배신자들’이며 ‘이런 행사는 북한 정권을 흔들려는 미국이 만든 것’이라는 것이었음.
- 이들은 행사 시작 전에도 같은 주장을 담은 보도자료를 이례적으로 배포하는 등 ‘북한 인권’이 논의되는 데 대해 예민하게 반응했음.

■ 북한, 유엔본부서 열린 인권행사 비난(5/2, 연합뉴스)

- 북한은 미국 뉴욕 유엔본부에서 지난달 30일 열린 북한인권토론회에 대해 ‘반복 모략행위’라며 미국과 유엔을 싸잡아 비난했음.
- 조선중앙통신은 이날 논평에서 “미국이 또다시 인권토론회를 벌여 놓은 것은 허황하기 그지없는 우리의 인권문제로 공화국의 존엄과 영상(이미지)에 딱칠을 하려는 것을 실증해줬다”고 강조했다.
- 유엔에 대해서는 “미국의 지휘조종하에 인간추물들의 거짓증언에 계속 놀아나 각국의 주권적 평등, 국제적 공정성을 보장하여 신뢰를 받아야 할 국제기구로서의 명예를 훼손하고 오욕을 사고 있는 것은 간과할수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특히 유엔이 이번 인권토론회에 얀 엘리야슨 사무부총장 등을 참가시켜 미국의 입장을 대변했다며 “객관성과 공정성의 원칙이 사라지고 유엔무대가 정치협잡의 난무장으로, 대결장으로 전락했다는 것을 보여준다”고 주장했다.
- 통신은 북한의 유엔대표부 직원들이 이날 토론회 진행을 방해하는 국제적인 추대를 보인데 대해서는 오히려 “탈북자들을 내세워 있지도 않은 우리의 인권문제를 꺼내 국제사회에 여론화하려던 미국의 책동이 만장의 조소와 비난을 받고 유산됐다”고 주장했다.
- 행사에서 증언자로 나온 탈북자들에 대해서도 “미국이 써준 영어로 된 증언 각본을 제대로 읽지 못해 웃음거리를 자아냈다”고 폄하하고 ‘인간쓰레기’라는 등의 원색적 비난을 퍼부었음.
- 북한 유엔대표부 당국자는 행사 당시 탈북자들의 증언 도중 발언권 신청도 없이 성명서를 읽어 회의 진행을 일시 중단시키는 등 소란을 일으키면서 국내외 언론들로부터 ‘추태’라는 비난에 직면했음.

3. 탈북자

- “행동하라! 탈북자들이여” 수잔 솔티 대표, 北 인권개선 탈북자 역할 강조(4/28, 국민일보)
 - 미국의 인권단체 연합체인 북한자유연합의 수잔 솔티 대표는 27일 북한의 반인도적 인권 유린을 종식시키기 위한 ‘행동’을 촉구했다고 보도했음.
 - 솔티 대표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전날 개막된 제12회 북한자유주간을 맞아 북한의 변화를 위한 탈북자의 역할을 강조했다.
 - 솔티 대표는 탈북자들이 십수년간 증언했던 반인도적 범죄에 해당하는 인권유린이 북한에서 자행되고 있다는 것을 지난해 발간된 유엔 북한인권조사위원회(COI)의 보고서가 인정했다고 말했음.
 - 솔티 대표는 탈북자들이 북한에 남은 가족, 친지와 연락을 하면서 북한 주민에게 외부세계의 정보를 전달하고 그들을 외부와 연계시키면서 북한의 미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 탈북자 김성민 “미국에 북 제재법 완성 호소하겠다”(4/28, 연합뉴스)
 - 탈북 이후 자유북한방송을 운영하며 탈북자 지원 등의 운동을 해 온 김성민 자유북한방송 대표는 “북한을 테러지원국으로 재지정하고 대북 제재법안을 완성하도록 미국 측에 호소하겠다”고 밝혔다.
 - 북한자유주간 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한 김 대표는 27일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 계획이 올해 북한자유주간 행사의 첫 번째 주제라고 설명했다.
 - 북한은 대한항공 여객기 폭파 사건을 계기로 1988년 테러지원국으로 지정됐다가 2008년 부시 행정부와 핵 검증에 합의하면서 해제됐음.
 - 현재 미국은 이란과 수단, 시리아를 테러지원국으로 지정하고 있음.
 - 김 대표는 “중국 정부에 의해 진행되는 탈북자 강제북송을 막기 위한 운동”과 “미국 정부에 대한 탈북자 단체 지원 요청”도 이번 행사의 주제라고 덧붙였다.
 - 그는 “북한 정권이 이 시간에도 계속 탈북자들을 위협하는 것은 탈북자들 때문에 정권이 지키고 싶어 하는 비밀을 더 이상 지키지 못하게 됐기 때문”이라며 탈북자들의 활동이 “북한 주민을 살리기 위한 일”이라고 주장했다.

- 인신매매 10대 탈북 여성 도움 요청(4/30, 자유아시아방송)
 - 중국 동북지방에서 탈북자 구출활동을 하고 있는 정 모 씨는 최근 2명의 탈북 여성들이 자유를 찾아 떠났다가 뒤쫓아 온 중국인들에게 붙잡히는 바람에 실패했다고 밝혔다.
 - 정씨에 따르면 그가 구출하려고 했던 탈북 여성들은 열아홉 살의 어린 여성 한 명과 20대의 여성 한 명, 이렇게 모두 두 명임.
 - 이들은 각각 2년 전과 10년 전에 중국에 팔려와 중국인 남편에게 시집갔던 여성들로, 한국 등 자유세계로 가길 희망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 이들 중 20대의 여성은 뒤쫓아 온 중국인 남편 등에 의해 붙잡혀 어디론가 끌려가고, 10대의 여성만 겨우 도망쳐 현재 중국 모처에 은신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12살에 부모 형제를 다 잃고 북한에서 떠돌이를 하던 이 씨는 중국에 가면 잘 살 수 있을 거라는 북한 브로커들의 말을 듣고 중국으로 넘어오게 되었다고 인터뷰에서 밝혔다.
 - 자신이 얼마에 팔렸는지조차 모르고 17살에 중국 인신매매조직에 넘겨진 이 씨는 자기보다 13년 이상인 중국인 남성에게 ‘시집’갔다는 것임.
 - 하지만, 이 중국인 남성도 정신적으로 문제가 있는 지체 장애인으로 가정적 박해가 심해 결국 탈가하게 되었다고 이씨는 덧붙였다.
 - 한국에 가기를 원한다는 이 여성은 “돈이 없고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지 못해 한국으로 가지 못하고 있다”면서 미국의 탈북자 단체에 도움을 요청했음.
 - 이 단체 관계자는 “현재 이렇게 도움을 요청해오는 탈북 여성들이 적지 않다”며 “자선음악회 등을 통해 모금된 기금으로 탈북 여성들을 구출하겠다”고 밝혔다.

4. 이산가족

- 北 이산상봉 재개 움직임…대상자에 쌀·고기 제공(4/27, 조선일보)
 - 북한 당국이 최근 이산가족에 대한 재조사 사업을 시작하면서 이들에게 특별 식량과 식료품을 제공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 이에 따라 북한이 광복 70년을 맞아 남북 이산가족 상봉을 재개하려는 것

- 아니냐는 관측이 나옴.
- 대북 소식통은 26일 “노동당의 지시로 지난달부터 남조선에 가족·친척이 있는 사람들에게 대한 재조사 사업을 시작했고, 매달 이들에게 흰쌀과 계란, 기름, 고기, 술, 양복 옷감 등을 제공하고 있다”고 전했다.
 - 북 당국은 또 평양과 지방의 이산가족들에게 노동당기가 그려진 김일성·김정일 배지(간부용)를 나눠준 것으로 알려졌다.
 - 이 소식통은 “이산가족 상봉에 내보내기 위해 대상자들의 영양상태를 미리 좋게 하려는 의도로 보인다”라며 “최소 몇 개월은 잘 먹어야 효과가 있기 때문에 전에 없던 조치를 취하는 것 아닌가 생각된다”고 했다.
 - 북한은 상봉 보름 정도 전 지방에 사는 이산가족들을 평양으로 불러 합숙을 시키면서 영양보충과 사상교육 등을 해왔음.
 - 북한 전문가들은 “김정은 집권 이후 북한도 먹고살 만해졌다는 것을 선전하기 위해 이전보다 앞당겨 사전조치를 취하는 것 같다”고 했다.

5. 납북자

- 특이사항 없음

6. 국군포로

- 특이사항 없음

7. 대북지원

- 통일부, 5년 만에 대북 비료지원 승인(4/27, 자유아시아방송)
 - 남측의 통일부가 민간단체 에이스경암의 대북 지원을 승인했음.

- 지원 규모는 온실 조성사업에 필요한 비료 15톤과 신규 온실 건설자재 50동분량, 영농 기자재 등 컨테이너 22대로, 이는 20만 달러 상당의 금액임.
 - 이번엔 이례적으로 방북단도 꾸려졌는데, 방북단은 28일 오전 지원물자를 싣고 경의선 육로를 통해 지원 장소인 황해북도 사리원으로 떠남.
 - 그동안 쌀과 옥수수과 같은 식량에 한 해 대북지원을 승인했지만, 비료지원은 5년 만에 처음임.
 - 이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독일 드레스덴에서 발표한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 확대와 관계가 있다고 통일부 측은 밝혔음.
 - 비록 민간 차원의 소규모 지원이지만 천안함 피격사건 이후 처음으로 남측 정부가 대북 비료지원을 승인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음.
- 미 NGO, B형 간염 예방접종 위해 5월 방북(4/28, 미국의 소리)
- 미국의 구호단체인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 관계자들이 5월 19일부터 6월 6일까지 북한을 방문할 예정임.
 - 이 단체의 테리 스미스 국장은 북한으로부터 최근 비자 승인을 받았으며, 방북 기간 중 현지 보건 관계자들에게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음.
 -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지원하는 결핵과 간염 전문병원의 보건 관계자들에게 B형 간염 예방접종을 할 예정이라는 설명임.
 - 이 단체는 당초 지난해 11월 방북해 B형 간염 예방접종을 실시할 예정이었지만 에볼라 바이러스 차단을 위한 북한 측 조치로 방북을 연기했었음.
 - 스미스 국장에 따르면 조선의 그리스도인 벗들이 북한에서 B형 간염접종을 실시하는 건 이번이 처음으로, 예방접종 약은 세계보건기구 WHO와 유엔 아동기금 유니세프가 제공함.
 - 이 단체는 앞서 발행한 소식지에서, B형 간염 환자들이 값비싼 항바이러스 약품을 평생 복용해야하기 때문에 완치가 힘들다며, 따라서 예방에 주력해야 한다고 밝혔음.
 - 그러면서 북한 주민 12%가 B형 간염 보균자이고, 이 가운데 15%에서 25%가 간암이나 간 질환으로 사망하는 것으로 추정했음.

- 영국 NGO, 북한 황해남도에 6번째 빵공장 가동(4/28, 미국의소리)
 - 영국의 대북 지원단체인 ‘북녘어린이사랑(Love North Korea Children)’이 황해남도 과일군에 새로운 빵 공장을 세우고 가동을 시작했다.
 - 이 단체 관계자는 황해남도에 새로 세운 6번째 빵 공장이 지난 11월 말부터 본격적인 가동에 들어갔다고 말했다.
 - 이를 통해 이 지역의 4살에서 6살 사이 북한 어린이 4천 명이 매일 빵을 제공받고 있다고 이 관계자는 설명했다.
 - 이 단체는 앞으로 7살에서 13살 어린이에게도 빵을 지원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한국 출신인 북녘어린이사랑의 조지 리 대표는 지난 2001년 영국 시민권을 받고 평양을 방문하면서 북한과 인연을 맺은 이후 2006년 함경도 라진 지역에 처음으로 빵 공장을 세워 하루 2천5백 명의 어린이들에게 빵을 제공하기 시작했다.
 - 이어 평양과 평안북도 향산군, 황해북도 사리원, 남포, 황해남도 과일군에 빵 공장을 세워 현재 약 2만4천여 명의 어린이들에게 빵을 제공하고 있음.
 - 이 단체에 따르면 북한 어린이 한 명에게 한 달 간 빵을 지원하기 위해서는 영국 돈 4파운드, 미화 6달러가 필요함.

- 호주, 240만 달러 대북식량지원(4/30, 자유아시아방송)
 - 호주 정부는 지난4월 북한 주민에 대한 영양지원으로 미화 약 240만 달러 상당의 300만 호주 달러를 세계식량계획에 기부했다고 밝혔다.
 - 호주 국제개발청(AusAID)은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인 2015회계연도에 유엔의 식량구호기구인 세계식량계획을 통해 북한의 어린이와 임산부에게 우유분말과 두유를 공급한다고 덧붙였다.
 - 호주 정부는 북한이 핵무기 개발을 위해 핵실험을 강행한 2002년부터 북한에 대한 직접적인 개발지원을 중단한 후 유엔 기구를 통한 제한적인 인도주의 지원을 유지하고 있음.
 - 국제개발청 관계자는 고난의 행군 시절인 1994년 이후 제공한 대북지원금이 8천500만 달러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 국제적십자, ‘북한 3개 지역 상하수도 시설 완공’(5/1, 미국의소리)
 - 북한 평안남도과 함경남도 등 3개 지역에서 진행된 상하수도 시설 공사가 최근 완공됐다고 국제적십자사(IFRC)가 밝혔음.
 - 국제적십자사는 1일 공개한 ‘2014 연례 북한 사업 보고서’에서 북한 조선적십자회(DPRK RCS)와 협력해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평안남북도와 함경남도 등 5개 지역에서 식수, 위생 사업을 벌여왔다고 밝혔음.
 - 이 가운데 평안남도 송천리와 석촌군, 함경남도 금야군 내 상하수도 시설이 완공돼 이 지역의 6천3백29가구, 2만4천여 명(23,733)이 깨끗한 식수를 공급받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음.
 - 보고서에 따르면 평안남도 송천리와 석촌군, 평안북도 대천군, 함경남도 용왕군과 금야군 내 1천 가구에서 진행되던 위생시설 공사도 마무리 됐음.
 - 또 평안남도 석촌군과 함경남도 금야군 병원에도 위생시설이 설치됐음.
 - 국제적십자사는 평안북도 대천군과 함경남도 용왕군 지역에서는 수도 공사가 76% 진행됐으며, 조만간 공사가 마무리 될 것이라고 밝혔음.
 - 국제적십자사는 북한 내 수, 위생 사업이 북한 여성과 어린이, 노인들이 강이나 연못 등에서 물을 길러 나르는 수고를 덜고 수인성 질환도 줄일 수 있다고 밝혔음.
 - 하지만 겨울철에는 전력 부족으로 식수 공급 시설이 정상적으로 가동되지 못해 주민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밝혔음.
 -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북한 공중화장실과 유치원, 보육원 등에 태양열을 이용한 수도 펌프와 온수 공급시설을 시범적으로 설치할 예정이라고 국제적십자사는 밝혔음.

8. 북한동향

- 최근 ‘세계 대중보도수단들에 미국의 인권관련 소식이 자주 실리고 있는 것’은 “미국이야말로 인권유린의 주범이라는 것을 실증해주고 있는 것”이라고 미국의 ‘인권재판관 행세’ 비난(4.28, 중앙통신·민주조선)

- 美 백인경찰의 흑인사살사건 관련 ‘저들의 인권허물은 제껴놓고 다른 나라의 인권문제를 걸고드는 것은 자국의 인권유린만행에 대한 국제적 비난 무마를 위함’이라며 ‘세계의 엄정한 심판을 받아야 할 것’이라고 주장(4.29, 중앙통신·노동신문/또다시 드러난 인권유린왕초의 정체)

© 북한인권연구센터 제공